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2. 04

VOL. 665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의 내일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CONTENTS

04

24

26

2022. 04 / VOL. 665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김수옥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종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전방위 의회외교 펼쳐
박병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방 받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11 특집 - 국민통합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갈등과 증오의 시대, 국민적 대타협으로 풀자 _박철곤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정치 협치 이뤄야 _이현우
한미동맹 강화하되 생존, 평화, 공영 원칙 신중히 고민해야 _김흥규
새 정부 과제는 경제 양극화 해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_이정희
보편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제와 격차를 줄여야 _정해식
사회통합 개혁의 핵심, 일자리 문제 _박명준

24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우리 경제안보 외교 강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 위해 노력"
_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 도발 등 현안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
_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28 길에서 길을 찾다 _정춘숙 의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인 '수지'

32 의원의 좌우명 _유기홍 의원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34 칭찬합시다 _박완수 의원
"정치인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36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김병주 의원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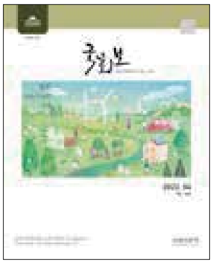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8

32

34

36



표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우리와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켜가겠습니다.

38 법률 시대를 읽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_채수근

40 국회 주재관 리포트
초고령사회와 조세법률주의의 역할 _조승래

43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46 법 시행 그 후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으로 보호

48 만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50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핫 스탬핑'으로 자동차를 더욱 가볍고 튼튼하게

52 위원회는 지금
국회,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 논의

54 국회 사람들
"헌법적 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국회, 제게는 최고의 직장이죠"

56 기고
"전쟁 속에서 시작한 국회도서관,
디지털혁신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 날다" _이명우
유럽의회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_이주홍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 치른 국회채용시험(입법고시) _이문범

64 국회 뉴스

68 이 달의 서평
남아 있는 모든 것 _정하린

70 고전의 향연
나는 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 _신승운

72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한 키이우(키예프) 루시와 코자크 _이광태

75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산수유

7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회의록으로 보는 여성가족위원회 _김영중

78 우리 건축 이야기
태종의 창덕궁과 세종의 경복궁에 담긴 여러 겹의 쌍 개념들 _임석재

82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대전 계족산 _유인근

86 바이러스의 역사
백신을 맞지 않아 창궐한 병, '홍역' _도현신

88 국회 미술관
자연의 이치와 그림의 역동 _김준기

92 생활 속 우리말글
한자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노력 _김풍기

93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3월 21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전방위 의회외교 펼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등을 위해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 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순방했다.

박 의장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44회 IPU 총회에 참석해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의회 지도자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기반 확대, 경전투기와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촉진, 세종시 건설 경험 전파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등을 위해 광범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이 3월 20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 의장, 조코위 인니 대통령,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조코위 대통령과 단독 면담,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등 양국 경협 강화하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0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하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와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IPU총회에 참석한 110개국 세계 의회 대표단 중 조코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의회 지도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유일하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발리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PU총회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한 직후 가진 면담에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양국 경제 협력 강화, 한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한국이 행정수도 이전을 결정한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의정생활 20여 년의 반 이상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의장을 맡고 난 이후에도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 힘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조사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행정수도 이전 관련 경험을 배우겠다"면서 "한국의 세종시에 갈 것이고, 의장님을 한번 더 뵙고 싶다"고 방한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2024년 8월에 있을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이와 더불어 조코위 대통령에게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요소수가 부족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지원을 해줬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조속히 비준돼서 양국관계가 더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폰펫 위칫촌라차이 태국 상원의장과 면담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과 잠수함 건조 협력에도 인도네시아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IPU 총회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주제 연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1일 IPU총회 본회의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를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번 총회에는 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66개국 의원단 등 총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연설을 통해 "의회가 지구촌 탄소배출 제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행의 선도자'와 '정의로운 전환의 수호자', '녹색산업의 촉진자'가 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의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일을 의지를 갖고 선도하자"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의회가 수호자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며 "한국의 경우 친환경·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친환경·녹색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촉진자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스리랑카의 지지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아베와르다나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난 1월 스리랑카 방문시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에 대해 장기

라시드 딸비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 및 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IPU총회 현장에서 다각적인 대면 외교전 펼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2일 이번 IPU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도 별도 면담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푸안 의장에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과정에서 한국의 세종시 건설 경험을 배우고 싶다”면서 “조코위 대통령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세종시를 시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푸안 의장과의 면담에 앞서 태국의 폰펫 위칫촌라차이 상원의장과 톤티시린 크라이시드 상원 부의장을 만나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태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면담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서 “1997년 IMF 금융위기 때 철수한 한국계 은행들의 태국 재진출 허용과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되었으며, 세계가 인정한 5개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태국이 공동으로 백신을 생산함으로써 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라시드 딸비 알라미 모로코 하원의장의 요청으로 총회장에서 즉석 회담도 가졌다. 모로코 하원의장을 연임하고 있는 알라미 의장은 정보통신부 장관과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박 의장은 알라미 의장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로코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알라미 의장은 “기꺼이 지원하겠다. 한국과의 협력증진은 모로코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알라미 의장은 “올해가 한·모로코 수교 60주년이다. 모로코에서 양국 국회의장이 함께 기념행사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 밖에도 이집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스리랑카 대표단과 오랜 지기를 만난 듯 반갑게 인사하며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회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상·하원의장 만나 경전투기 사업 한국 FA-50기종 선정, 디지털 협력 확대 등 요청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말레이시아 상·하원의장을 잇

라이스 야팀 말레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과 회담

달아 만나 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먼저 라이스 야팀 말레이시아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확산에도 양국 교역액이 205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면서 "우리 수자원공사(K-water)가 말레이시아에 동남아 거점 본부를 설립했고 SK넥실리스가 동박 공장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디지털정부 추진을 포함해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래 전부터 디지털정부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이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라이스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박 의장은 곧바로 하원으로 이동해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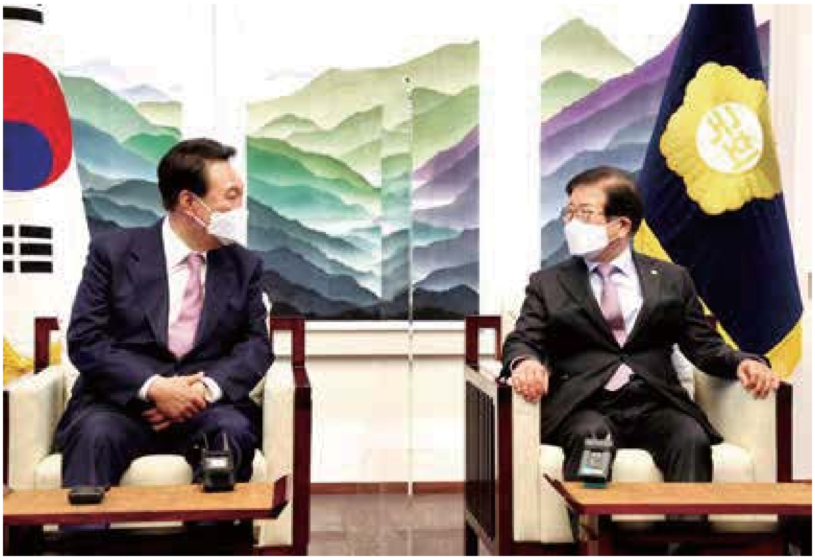
박 의장은 "양국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이기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이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회 협력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작년 한국 요소수 사태 때 말레이시아 기업이 100만 리터의 요소수를 공급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5일 말레이시아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를 방문했다. 푸트라자야는 우리나라가 세종시 건설 당시 모델로 삼았던 곳이다. 푸트라자야시 당국은 "정부 부처 건물들의 건설은 지난해 완전히 완료가 됐다"면서 "푸트라자야로 이주하려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셀랑오르주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끝으로 7박9일 간의 IPU총회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박상주 연설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3월 10일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방을 받고 "앞으로 국회와 소통해주시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당선인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 존중을 강조해주셔서 저희도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 저도 항상 대화와 타협을 위한 소통의 정치, 협치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절감하셨겠지만 국민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격차가 너무 커서 이를 해소하는 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협치를 이루려면 선의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처음 뵀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를 존중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을 상의하는 정부 운영을 하겠다"며 "의장님께서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의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의회와 논의하겠다. 국회에서 하는 일,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늘 국정의 중심에 의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면 어떠한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도 국민께서 다 이해하시고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3월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원내대변인,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8일 의장집무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확실하게 견제할 건 견제하며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로 제1야당 원내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공농성 해결사란 평을 들을 정도로 약자와 민생을 위해 애써 온 분"이라며 "약자와 민생에 고달픈 분들의 많은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평소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국회 운영 정신을 앞장서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제가 늘 높게 평가하고 존경했다"면서 "이제 정권이양기에 있고 또 우리로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자문을 구하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월 24일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을 선출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제19대국회에서 처음 당선된 뒤 3선을 하며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을지로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 3월 25일 새 원내수석부대표로 진성준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선임됐고, 27일에는 오영환·이수진 의원이 신임 원내대변인에 임명됐다.

특집

국민통합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 갈등 등 국민통합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민대통합 방안을 분야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편집자주>

갈등과 증오의 시대, 국민적 대타협으로 풀자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정치 협치 이뤄야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미동맹 강화하되 생존, 평화, 공영 원칙 신중히 고민해야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 정부 과제는 경제 양극화 해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보편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제와 격차를 줄여야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통합 개혁의 핵심, 일자리 문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갈등과 증오의 시대, 국민적 대타협으로 풀자

박철곤 소장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노정시켰다.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갈등이 얽히고설켜 쌓이고 곪아버린 갈등과 증오의 덩어리로서 지금 당장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의 제기다.

개표가 끝난 선거 다음 날 아침, 주변의 지인들은 완전히 상반된 두가지 반응을 보였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다"며 환호하는 사람들과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선거 결과에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람들도, 핵심 선거운동원들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 유권자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열심히 SNS에 글을 쓰고 글을 퍼날랐다. 그 내용은 주로 자기가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날선 비방과 폄하, 모욕의 내용들이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넘치고,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새로운 분노를 양산하는 분열적 확증편향의 악순환 기제 역할을 했다. 오죽하면 '총만 안 들었지 내전상태'라는 걱정까지 있었을까.

뿌리 깊은 지역감정, 이념차이, 세대간 갈등 등 확대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의견차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기반한 데에 심각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의 일방 당사자로서 그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인식에 따라 지지자를 정하고 이견을 용납치 않는 확고한 편향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출신 지역에 기반한 정치적 선택에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차이까지 겹쳐지고 이에 계층간, 세대간 갈등요인과 남녀갈등 문제까지 종횡으로 얽히면서 상호부정적 나선형 확대재생산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는 도저히 풀 길이 없는 복합적이고 서로 용인할 수도 없는 증오의 덩어리가 되어 버렸다. 어

떤 갈등조정 이론으로도,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 든다.

근래 우리나라의 갈등상황은 연간 82조 내지 246조원의 사회적 비용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주변에 넘쳐나는 내로남불과 님비현상은 생각있는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우리사회의 갈등은 이처럼 복잡하고 풀기 어려워진 것일까?

무엇보다 정치와 권력의 과도한 영향력과 분열된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 주체들의 책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4색당쟁부터 최근 대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갈등의 주요 요인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이성적·논리적 사고와 토론에 익숙지 않은 우리 국민의 감성적 DNA를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내고 과정을 합리화하거나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많은 갈등현장에는 합리적 토론 보다는 소위 떼법, 정서법이 횡행하기도 한다.

셋째는 뿌리 깊은 지역감정과 지역간 불균형 성장의 유산이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정치 대결로 시작된 지역갈등은 3김시대를 거치며 더욱 골이 깊어졌고 정치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 대결로 겹쳐졌다. 또한 도시와 공업,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은 성장의 수혜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으로 이어져 계층간 갈등까지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3중구조의 복합갈등을 초래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지도는 국토가 동서로 양분된 형태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공동체 해체 위기까지 걱정하게 하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완화해야 할 것인가?

정치·사회적 국민통합기구 만들어야

필자는 이에 제안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 및 제 정당, 사회지도자가 함께 모여 갈등과 증오의 덩어리를 풀기 위한 정치·사회적 국민통합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온 국민 환시리(環視裡)에 해법을 논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갈등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새 정부 한 편의 노력은 또 다른 정쟁만을 낳을 가능성이 있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여·야, 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치의 중간지대에서 개시개비(皆是皆非)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갈등의 근원을 푸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어떨까?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치지도자들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이 바로 적기다. 신·구 정부가 교체기에 있고, 선거 직후 국민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당선후보와 낙선후보, 현직 대통령이 모두 통합을 가장 먼저 언급할 만큼 국민통합이 제1의 시대적 과제라는 상황 인식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부할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다.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공감과 결심이 절실히 기대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정치 협치 이뤄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사회통합이고 정치분야에서는 여야의 협치다. 정치권의 협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 당면한 과제다. 이미 30년 전에 정치학자 레이파트(Liphart)는 다수의 지배원칙인 다수결적 민주주의를 넘어 협의제 민주주의의 수용을 역설하며 반대보다는 합의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주문했다.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매우 낮다.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갈등 수준은 OECD 국가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정치적 갈등 역시 이들 국가 중 네번째로 높다. 협치를 위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두 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소수의견도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출직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국무총리제 도입 등으로 권한 분산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현우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제도 바꿔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내용은 선거구 크기 확대다.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를 군소정당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아울러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개혁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모든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해당특위를 구성하겠지만 현역의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선거법 개정이 여야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정당간의 셈법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대명제에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양대 정당 지도부는 대승적 견지에서 기득권을 양보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가 넘는다. 국회를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3%도 되지 않는데, '국회를 전혀 믿지 못한다'는 답변은 30%가 넘는다.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의 신뢰도가 이처럼 낮은 상황에서 국회는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상당부분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이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대통령직은 견제 받지 않는 직책이 되었고 역대 대통령은 그 권력을 향유해왔다. 민주주의 운영원리가 권한 분산과 견제라는 원칙을 저버린 결과는 정권말기 몰락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축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혁을 위한 호기가 마련됐다. 개혁방안으로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총리가 대통령과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면 과거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국정파트너로서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양해나 신뢰가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례는 제도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책임총리제는 국회가 총리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의 권력체제가 참고가 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총리와 내각임명권을 국회가 가지면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축소되고 야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대선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원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근거해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권 그리고 통할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한 집중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제도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가능하며,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대통령의 권한 분산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해야

정치 협치를 이루기 위해 제안할 것이 있다. 국회법 33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요구하는데, 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회운영은 전적으로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야 한다. 그런데 군소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당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결국 다당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선거법 개정이나 책임총리제 도입이라는 제도개혁은 여야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점에서부터 협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도입돼도 현재 수준의 정치갈등이 지속된다면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결국 협치라는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의식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하되 생존, 평화, 공영 원칙 신중히 고민해야

김흥규 교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윤석열표 외교안보 정책이 곧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수위 과정을 통해 그간 당내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간은 당파적인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에 우선 집중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 윤곽이 나오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2.0이나 비핵·개방 3000(이명박 정부 시기의 대북정책 기조)의 재판이 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시대 조건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되는 세계정세

윤석열 정부가 직면해야 할 세계정세는 녹록지 않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선택의 압박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미·중은 추후 본격적인 충돌을 가정한 역량 강화와 세력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재동조화와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핵·미사일 능력의 제고로 적절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핵의 위협이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유럽에서의 충돌은 한반도로 타고 넘어올 수 있다. 세 번째로, 한일 갈등의 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울 전망이다. 21세기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정립해야 하나 그 길이 험하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신국제질서의 수립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국의 패권 강화로 귀결되지 않을 개연성도 크다.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고는 위험할 수 있다.

한국이 처한 조건을 보자. 한국은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단층선상에 위치한 국가다. 동시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수 있는 분단국가다. 외교적으로는 평화적 해결 원칙과 군사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국가다. 세 번째로는 시장 통상국가다. 시장 확대와 다자주의, 자유 항행, 규범

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국가다. 네 번째로 자원빈곤 국가다. 자원 확보는 국가의 핵심이익 영역이고, 공급망 확보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데 사활적인 이해가 달려 있다. 다섯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다. 자유, 민주, 인권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단, 중강국의 한계상 이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기준에 도달한 중강국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질서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국제적 연대 추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기존의 편승형 외교안보 전략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동-의존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신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는 국방·안보·외교·통일 순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추후 5년간 북한은 현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여건상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존의 핵·비핵국 간에 설정된 묵계가 무너지고 핵보유국이 핵으로 비핵보유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북한 역시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전략전술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한 연루의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이 시급하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기존의 편승형 외교가 아닌 보다 타개해 나가는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외교 역량 강화는 필수다. 북핵문제나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이며, 각급 정상회담의 의제에서도 그 우선 순위를 과감히 낮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예상보다 빠르게 냉전을 넘어선 강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가능한 세계로 접어 들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양대 체제 경합론, 중국의 천하 3분론, 러시아의 4대 영향권론이 경합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미·중 전략적 협력 시기에 향유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누리기 쉽지 않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현재 미·중 전략경쟁에서 격돌하는 사안들이 대부분 제로섬적인 성격의 이슈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가 상당수이고 이 선택을 주저한다면, 양쪽 모두로부터 러브콜이 아니라 냉대를 받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 외교·안보·경제적인 이해는 물론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대 북한을 넘어 글로벌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단, 관행대로 미국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추종하던 시기도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다 지켜주기도 어렵고, 심지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 외교는 이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자율성의 공간을 확대해야 하며, 보다 신중하고 섬세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은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를 추진한다는 목표와 생존(공존), 평화, 공영이라는 3대 외교원칙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개인적으로는 친미(親美)-협일(協日)-연구(聯歐)-화중(和中)-통아(通俄)-견북(牽北)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새 정부 과제는 경제 양극화 해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

이정희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다가오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확산이 곧 끝나기를 기대하며, 부담되는 과제를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통합·국민화합·협치'임이 3월 18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3월 15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자유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라는 순으로 보면, '열심히 잘하길 바람'이 9%, '공약 실천·약속 이행' 8%, '경제 회복·민생 안정' 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과 '부동산 안정'이 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가 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 각각 3%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3월 18일 대통령 인수위 현판식을 마친 후 개최한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생,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대책, 4차산업혁명, 저성장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국민통합, 민생, 코로나19 피해 대책, 저성장 양극화 해소, 4차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등은 피할 수 없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드느냐 일 것이다.

실제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쳐 민심이 분열되고 문재인정부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입장 차이,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어려움 호소,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탈원전으로의 전환에 따른 국

민의견 분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국민 불안감 증대 등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 차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산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나타나는 국민적 불만과 우려 등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더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이 둘로 나뉘며 그 분열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 무엇보다도 해소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며, 나이, 지역, 소득계층, 남녀, 대중소기업, 노사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열이 계속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고 이는 국가의 부담이며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이 아닌 부담만 남겨 주는 것이기에, 진영 논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통합과 화합의 정치와 정책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에 앞서 향후 5년의 정부 구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경제분야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격차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다. 특히 지난 2년의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지출에 비용부담을 높이며 소비를 억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엥겔계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37%에서 지난해 12.86%로 증가했으며, 특히 1분위 소득가구의 지난해 엥겔계수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해소가 눈앞에 놓인 과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상의 정도가 미약하다. 또 실제 손실을 많이 입었지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해 지원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고 풀어야 한다. 이미 당선인의 공약에서 손실보상 지원을 대폭 올리겠다고 했는데, 추가 지원의 재정부담 문제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 성장과 형평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은 경제정책의 기조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냐 형평이냐를 두고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을 챙기고 저성장 양극화 해결과 함께 혁신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기에, 결국 성장과 형평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 하겠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과제들을 진영 논리를 뛰어 넘는 과감한 정치 결단으로 국민통합을 이뤄 위기 극복의 성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보편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배제와 격차를 줄여야

정해식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 민주화를 경험한 이후 짧은 기간에 외형적 틀을 완비한 복지제도를 갖췄다. 시장 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과실을 골고루 나누고자 하는 복지제도의 확장 과정에 민주주의가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복지를 통한 분배 확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했다.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적 복지는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복지 확대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시장 경제를 통한 분배를 보완하는 복지 제도는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준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할 일이고, 시대정신을 찾는 길이다.

우리의 낮은 국민통합 상태는 배제와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겠지만, 지금은 정치, 사회, 문화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역할을 사회복지가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가 구조적 원인으로 차이가 날 때 이를 극복하는 것을 격차의 해소라고 말할 수 있다. 격차는 지역간 격차, 계층 격차, 세대 격차, 성별 격차가 대표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는 복지 시설, 문화 시설의 접근성 차이를 가져온다.

사회복지의 역할은 배제와 격차 보완

노동시장 참여, 소득 및 건강 수준에서 발생하는 계층, 성별, 세대 간 격차도 주목해야 한다.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이 중첩되면서, 갈등은 이념 갈등과 같은 추상적인 갈등에서 구체적이며 경제

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는 갈등으로 바뀌고 있다. 세대 갈등이 가치관 갈등에서 경제적 갈등으로 바뀌고 있고, 남녀 갈등도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다. 시장의 선호가 만들어낸 배제와 격차를 보완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역할이며, 민주주의를 통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과정을 완성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빈곤과 불평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같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합리적 설득과 대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안정적 생활에 대한 불안, 차별과 격차에 대한 불만,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사회에 대한 불신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은 배제와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평등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은 기회 및 자원 접근에 있어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에 대한 접근 제약이 더 심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런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적절히 맞춰 설계해야

우리의 생활이 다변화하면서 욕구도 다변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공부하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고,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가 모두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생애 사건들의 나열, 즉 생애주기가 대체로 나이에 따라 결정되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형평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욕구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가장 밑바탕이 될 소득보장을 보편과 형평의 원칙에 맞춰 설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개인의 책임에 맡길 수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는 양과 질이라는 공급 차원의 문제를 가진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사회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으로 보면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원칙에 따라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을 적절하게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보장이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특정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러한 지역은 어디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성장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의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보편과 형평의 조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실사구시(實事求是) 접근은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취약한 소득보장에 노출된 청년 세대, 노년 세대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정책 방향은 배제와 격차를 보편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감으로써, 불안과 불만을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남는 것은 불신이지만, 신뢰는 불안과 불만을 줄여나가는 모든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복지정책에서 성장, 분배, 민주주의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하는 이유다.

사회통합 개혁의 핵심, 일자리 문제

박명준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노동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으나, 결국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19 위기의 여파 등으로 인해 개혁의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이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통합을 거둘 수 있도록 참신한 방법의 사회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통합 개혁의 핵심지대에는 바로 일자리가 존재한다. 일자리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처소다. 동시에 일자리는 사회적 역할의 자리요, 또 사회적 지위의 자리이기도 하다.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는 누군가로 하여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것은 어떤 지위와 신분 상승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역할구조와 지위구조를 어떠한 식으로 또 어떠한 원리로 설정해 각 집단들의 비중을 정하느냐는 공공정책적 과제다.

일자리에 따라 기회와 보상의 격차 심해

현재 일자리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기회의 차등 내지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노동자라고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게 됐다. 정규직만큼이나 비정규직이 많아졌고, 임금근로자 못지 않게 비임금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났으며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다양한 종사신분들간에는 기회와 보상의 격차가 심하게 구획되어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의 심각성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생산현장에는 인력난, 구인난이 항존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뿐이다.

이른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노동소득만이 아니라 자산소득이 중요해졌고, 소득기회에 따라 신용기회까지 달라져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닌 이들은 좋은 신용점수를 받아 더욱 양호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그들의 자산 및 소득증식의 기회를 증대시킨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이 낮을 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안전장치의 수혜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보다 빈번하게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다.

원론적으로 한 사회가 커지면서 사회질서가 분화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조건의 일자리가 공조할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시각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들 간의 통합에 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치가 얼마나 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격차, 기회의 격차가 몇 배나 난다면, 그러한 질서는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귀족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라면 말이다. 후속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 향유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거나, 그래서 질 낮은 일자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미래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산층이 될 수 없다면 그 질서 역시 유지되기 어렵다.

소득과 기회의 격차 해소 위해 '사회적 표준' 만들어야

소득과 기회의 격차가 극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표준이라 함은 일자리에서 노동보상의 틀을 개별기업을 뛰어 넘어,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와 기준을 정립함을 의미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특히 그들의 경력과 숙련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큰 문제다. 그들에게 숙련과 경력을 기준으로 한 보상의 사회적 틀을 제공해 범기업적으로 적용시킨다면, 격차해소와 사회통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고임금을 향유하는 중상층 노동자들의 경우 연공급적 원리가 그들만의 기회로 작동한다. 그들에게는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의 도입을 도모하되, 그 역시 개별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그에 합당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표준에 근거한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개별기업 단위에서가 아니라 범기업들 단위에서 분배를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와 소통구조를 변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직무체계와 그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춰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배적으로 작동케 하는 일이다. 이는 결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내기 힘들고, 궁극에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의지와 노력투여가 없다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안양시동안구을)

"우리 경제안보 외교 강화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해결 위해 노력"

Q.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여당 간사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외통위는 그동안 다선 의원 위주의, 큰 틀에서 다음 정치역량을 고민하는 정치인들로 채워지다 보니 감시자이자 견제자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제안하고 견제하기 쉽지만 사소한 예산 집행이나,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을 변화시키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간사로서 외통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토로 기념관 건립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건설자재 비용이 상승해 기념관 건립이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세심하게 조율해 지원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Q. 최근 외통위가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첫 번째 성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영상국감'입니다. 제21대국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1995년 해외공관 국감 개시 이래 국회는 매년 해외현장에서 공관의 외교활동 및 교민보호 활동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국가별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가 최대 3주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21명의 국회의원이 해외 공관을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외통위는 헌정

사상 최초로 18개 해외 공관에 대한 영상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소홀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납부하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에서 약 7천353억 원(2017년 기준)에 이르지만,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및 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통위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재정·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 2020년 12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를 알려주십시오.

A. 최근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자국의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의 적대국으로의 이전 방지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며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직접적인 연관성이 큰 정책 중 하나가 통상 정책입니다. 통상 정책이 외교 및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1948년 이래 유지한 통상권한이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외교통상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공급망, 환경, 디지털, 기술표준 등에 대한 업무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분절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 외통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외교부 내 경제안보외교센터로 구성된 경제안보TF를 조직했습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4월 일본 정부는 2023년 봄부터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외통위원들은 DNA 손상과 암 유발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우리 정부에 행동을 요구해왔습니다. 오염수는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방류하기 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외통위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김석기 간사님은 정말 꼼꼼하고 열정적인 분이라 생각합니다. 외통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가 있는 날이면 누구보다 일찍 출석하셔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제나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석기 간사님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겸 간사장으로 활동하시며 재일동포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지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대표발의하시기도 했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재외동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경상북도 경주시)

"북한 도발 등 현안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

Q.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야당 간사위원님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나라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등 외교와 안보 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외통위는 주요국 및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과 동맹과 협력 등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해외에 계신 모든 재외동포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으로 상당히 비중있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경쟁 등 외통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힘 간사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이광재 위원장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외통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 당면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외통위가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최근 들어 국제적인 군사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태 등 일부 국가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벌어지지 않아야 할 끔찍한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외통위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의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 중인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얼마 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의 대책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외교적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의 핵심 일원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능동적·주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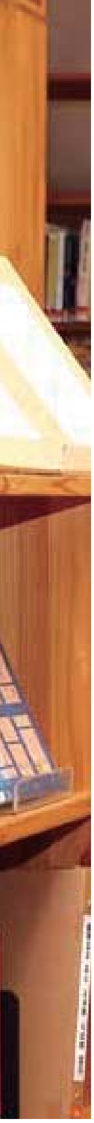
Q. 올해 해결해야 할 현안과 과제를 알려주십시오.

A.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벌써 10번째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현대화 지시를 하는 등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당선인과 협력의 최우선 순위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재무부는 ICBM 관련 대북제재 발표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안보 공조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국·중국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해 국제관계적으로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굳건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협력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존경하는 이재정 간사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국민과 지역, 여성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큰 성과를 내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십니다. 함께 외통위 간사로 활동하다 보니 다른 당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자주 연락드리고 뵙게 되는데, 언제나 나라를 위한 진중한 마음가짐과 섬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통위의 각종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데 일조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비교적 여야 중진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뛰어난 고견을 들을 수 있고, 국익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통위를 큰 문제나 갈등 없이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글** 박민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용인 '수지'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병)

인구 38만의 용인 수지. 얼핏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한 교통이 탁월한 입지와 산자락까지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가 무성한 곳처럼 느껴지지만 이 지역구의 정춘숙 의원은 "도심 속 전통 있는 역사가 깃든 고장일 뿐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큰 자산은 우리 지역구민들"이라고 소개했다.

'독서' 이상의 경험을 나누는 '느티나무도서관'

정춘숙 의원은 취재진과 함께 가장 먼저 경기도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느티나무도서관'을 찾았다. 2007년 개관한 느티나무도서관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유일의 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일반적인 도서관의 딱딱한 분위기와 규칙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곳곳에 소파와 평상이 놓여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할 수 있고 마음껏 떠들며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또 아이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

정 의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관계를 맺는 우리 동네의 안식처"라고 소개했다. "도서관이지만 장서규모보다 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머물게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마을포럼이나 낭독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느티나무도서관에서

회도 열리는데 저도 틈날 때마다 낭독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호흡하려고 해요.”

정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처럼 앞으로의 도서관도 ‘지식공유 플랫폼’이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역위원회에서도 ‘도서관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삶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만드는 등 공공도서관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도시의 역사와 공존하는 ‘심곡서원’

용인 수지구 상현동,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숲 사이로 정암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심곡서원(深谷書院)이 보인다. 심곡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에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2015년 경기도 유형문화재에서 국가 사적으로 승격됐다. 조광조 선생의 무덤도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정몽주, 조광조, 채제공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의 안식처나 사당, 서원이 전부 용인에 있는지 모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심곡서원 전경

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용인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심곡서원은 경기도에서 잘 보존되고 있는 서원입니다.”

서원 강당 옆에는 책과 문서가 보관된 ‘장서각’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재실이자 배향객들의 숙소로도 사용된 건물인 ‘고직사’가 있다.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건물인 사당에는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주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심곡서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로 조성될 역사문화공원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한옥공연장, 광장, 휴게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우리 수지구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2020년 시민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심곡서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논의된 의견들을 역사문화공원 조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숙원사업이었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립

여성운동가 출신인 정춘숙 의원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담부 간사로 시작해 상임대표까지 지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23년 동안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다.

제20대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 처리에 힘썼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제21대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2년 간 논의되었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다.

지난해 개소한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은 정 의원의 공약 중 하나였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은 정치 입문 전에도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대표발의할 만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노력에 힘썼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중인 정춘숙 의원

해요. 수지에는 일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많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죠. 이곳 역시 기획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레스피아'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하수처리방법 설명에 대해 듣고 있는 정춘숙 의원

‘냄새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레스피아’

수지구 죽전동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하수처리장 ‘수지레스피아’는 하루 1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용인에서는 하수처리장을 ‘레스피아’로 부른다. 레스피아(Respia)는 휴식(rest)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어나 친환경 편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한 용인시 하수처리장의 브랜드다.

레스피아에선 시커먼 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악취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시설을 지하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지상에는 주민센터,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산책로 등이 갖춰져 있고, 아트홀과 스포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정 의원은 “모두가 기피하는 애물단지도 경기 용인시에서는 보물단지로 변한다”며 웃었다.

축구장 뒤편으로 보이는 수지청년공간 LAB 또한 정 의원의 공약 중 하나였다. 하루 1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100m 높이의 굴뚝을 조망타워로 꾸몄다. 타워에 있는 사무실에 수지청년공간 LAB을 만들어 미디어룸과 공유주방 등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수지에 와서 만난 청년들이 ‘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LAB을 조성했죠.”

정춘숙 의원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지역현안은 ‘교통문제’라고 했다. 매일 이용하는 용서고속도로는 새벽 6시 30분부터 교통체증이 시작되는데 그만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 정 의원은 “제2용서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3호선 연장 공약 이행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금까지 수지에는 주민들이 여가를 보내고, 이웃과 함께할 공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항상 지역을 둘러보며 함께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서로 돕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가슴이 뛰웁니다. 지역을 떠나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용인 수지: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나침반이 되어준 가르침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서울 관악구갑에서 3선을 한 유기홍 의원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교육위원회에서 했고,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교육분야 전문가다. 유기홍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그간의 활동,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기홍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다.

“저는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 교훈이 마태복음의 한 구절인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이 말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차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유기홍 의원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민주화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게 됐다.

“대학 때까지는 거의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다면, 감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울대생이 데모하다 잡혀왔다고 하니 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며 못살게 굴기도 하고 아예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츰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유기홍 의원은 재소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주제를 놓고 말싸움을 하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기홍 의원에게 의견을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싸움을 해결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재소자가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대신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나를 인정하고 같은 식구로 받아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할 때나 그 후 정치인으로 살아온 삶도 국민을 섬기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를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내 할 일을 하면 그분들도 나를 인정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국회의원이 선수가 높아지면 오만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가르침이 계속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제 좌우명은 삶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진화해온 것 같습니다."

유기홍 의원은 고(故)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창립했다. 그 후 김근태 상임고문이 정치권에서 활동하게 된 후에도 유 의원은 재야에 남아 민청련 의장,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 의장을 맡는 등 민주화운동을 이어갔다.

200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사회비서실을 만들면서 청와대에 들어간 유기홍 의원은 2002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후 청와대에서 나와 유시민, 배우 문성근 등과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해 노무현 대통령을 도왔다.

그 후 개혁국민정당과 민주당이 합쳐져 열린우리당이 되었고, 유기홍 의원은 2004년 서울 관악구갑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처음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순위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교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서울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으로 낙후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육이 발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 만드는 교육 분야 의정활동에 주력… 지역 현안도 챙길 것"

제17대국회부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유기홍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제19대국회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유기홍 의원은 제21대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것을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중 하나로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교육정책도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올 7월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유기홍 의원의 주요 관심사다. 그는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공론화시켰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과 '국립대학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 국민의 관심사면서 미래를 만드는 일인 교육 분야가 선진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기홍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현안은 낙성벤처밸리사업의 완성이다.

"제19대국회 출마 때 처음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사업을 통해 낙성대 일대에 벤처밸리가 조성되었고 여러 벤처기업이 속속 이곳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벤처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성벤처밸리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며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관악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 먹을 밥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정치인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

박완수 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이은주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보 4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박완수 의원이다.
그를 추천했던 이은주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부 정책과 행정을 날카롭고 균형 있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토론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이은주 의원님이야말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면서 "정당, 진영과 이념을 넘어 높은 균형감각으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 의원님의 의견이 존중받고 반영된 사례가 많다"고 화답했다.

오랜 행정 경험이 정치에 도움될 것이라 믿어

박완수 의원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남도청에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했다. 경상남도 합천군 군수와 김해시 부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농산물 수출과 경영행정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후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경남 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2016년 정치계에 입문했다.

"창원시장으로 3선을 지내며 창원의 도시기반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노력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행정 집행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정책, 예산 등의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

에 맞게 수립하고 개선하겠다는 생각에서였지요. 행정 경험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직 소방대원 부친으로부터 온 문자 잊지 못해

박완수 의원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120여 건을 대표발의했고, 도로·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제도와 재난대책 마련 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제도 개선도 이뤄냈다.

"몇 년 전 동물 구조를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소방차를 정차하다 뒤따르던 화물차와 추돌해 꽃다운 젊은 나이의 소방대원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법률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소방차량을 정차했던 행위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고인이 된 소방대원 등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했지요."

박 의원은 그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소방대원등이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을 부여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날, 순직 소방대원의 부친으로부터 '언제 포항에 들를 일이 있으면 냉면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조명의 대부분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정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결국 전국 고속도로 전체의 조명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는 "터널 조명체계 개선으로 고속도로 터널의 사망사고 등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결실을 맺을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영세상인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가 때로는 격렬하게 대치하고 다소 거친 방법으로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호선 의원을 칭찬합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저와 같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의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는 동료 의원입니다. 항상 차분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많은 분들과 두루 잘 지내지만, 정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것이 정치인의 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육군 제30 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 제3군단장을 거쳐 한미연합 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등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 그는 “군복을 입은 35년 동안 오로지 국가의 안위와 국민만을 생각했다”며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군인의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데 대해 김병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보 전문가’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망설인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전쟁의 위협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역할이 필요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한 국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력은 국방부와 군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예산과 법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성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국회의원 배지 속에는 많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바람과 열망,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에 늘 그 무게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큰 애정을 쏟았던 지휘관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졸업한 김 의원은 “중학교 2학년 무렵 이순신 장군과 김유신 장군

등을 보며 군인이 되어 국가안위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육사 입학 후 훈련과 공부, 체력단련을 병행하는 생활은 꽤 고됐지만 힘들 때마다 확고한 꿈을 원동력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병주 의원은 병사들에게 상당히 애정을 쏟았던 지휘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포병여단장 시절, 사령부 참모부 병사들을 위해 공관 휴게실을 개방했고 회식하는 병사들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술을 나눠준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군에 재직하며 진급할 때마다 부하 장병들의 땀과 헌신이 이 '계급장'에 녹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게 합당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관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해 감회가 새로웠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 등은 평화가 일상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안보 바로 알리고 싶어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가진 '소명' 중 하나는 바로 '안보 제대로 알리기'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한편 안보 관련 정보를 전달해 '안보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미군 전·현직 연합사령관, 한국전쟁 미군 참전용사들과 교류하며 한미동맹의 가교 역할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K-안보포럼'을 창립했고 '우주발전 세미나',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등을 열고 다양한 입법 및 예산 관련 과제를 발굴했다.

김병주 의원은 제21대국회에 입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말한다. 첫째, 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둘째,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에게 바로 알려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미래 위협에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특하게도 이름 난 '손자병법' 전문가다. 저서 '시크릿 손자병법'을 출간하기도 한 그는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병법서"라며 "2천500여 년 된 책이지만 현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군에 있을 때 손자병법을 부대 운영과 작전 계획에도 적용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승산이 있는지 짚어봐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말하는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도(道)의 정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는 백성과 군주가 '한 뜻(비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 진영 논리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4성 장군에서 국회의원이 된 김병주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군복을 입은 동안에도 목숨 바칠 각오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인과 정치인의 근본은 똑같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채수근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이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분야에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점차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발전법’ 외에는 주요 산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개별법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여야 각 당에서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공급망 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소병철·유의동·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고, 이를 통합·조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 제정법은 지난 2월 3일 공포됐으며,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 및 논의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총 8개장, 5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화단지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비용 및 금융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실시하며, 인·허가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화단지 지원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

넷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금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우수한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다. 한편, 동 제정법은 특별법임을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2042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신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관계 부처의 이견 제기가 있어 일부 조항의 수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특화단지 운영비용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절차와의 배치 가능성 및 다른 유사법률의 사례 등을 이유로 운영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측 의견을 고려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운영비용의 의무 지원'이 '운영비용의 우선 지원'으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례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대상사업 의무 선정'이 '대상사업 우선 선정 가능'으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으로 수정됐다.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제정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기반한 법률 집행을 통해 주요 첨단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와 조세법률주의의 역할

일본의 건강보험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적용 논의를 중심으로

조승래
일본 국회주재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10월 기준 28.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35.3%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급증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지난 20년간 의료비는 1.53배, 장기요양비용은 3.73배 증가해 연금 증가율(1.42배)을 넘어서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의료 관련 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일본의 사회보장비 추이> (단위: 조 엔)

구분		2000(A)	2010	2020(C)	증가(C/A)
사회보장비	연금	40.5	52.2	57.7	1.42배
	의료	**26.6**	**33.6**	**40.6**	**1.53배**
	장기요양(介護)	**3.3**	**7.5**	**12.3**	**3.73배**
	기타	8.0	12.0	16.2	2.03배
	급부비 총액	78.4	105.4	126.8	1.62배
고령화율		17.4%	23.0%	28.8%	1.66배

주: 2020년 사회보장비는 예산 기준
자료: 財務省. 財政制度等審議会財政制度分科会参考資料. 2021.4. P.3 재구성

일본은 우리보다 일찍 전국민의료보험(国民皆保険, 1961년) 및 장기요양보험(介護保険, 2000년)을 도입한 나라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직역을 기본으로 한 각종 피용자보험(被用者保険)과 기초 지자체 단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7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크게 나뉜다. 이는 1998년부터 지역의료보험 및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해 보험재정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와는 제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초고령사회 과제로 대두된 공적의료체계 재원 형성

일본에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의료체계의 재원은 사회보험

료, 조세(公費) 및 환자의 자기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회보험료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는 달리 급부와 부담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재정규율성 유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며, 나아가 보험료 납부자의 권리성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정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공적의료보험 재정을 운영하며,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민의료비(44조 3천895억 엔) 중 사회보험료로 충당된 비용이 49.4%(21조 9천426억 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의료 및 장기요양을 위한 국고부담액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団塊の世代, 1947~49년생)가 75세 이상의 연령에 접어드는 올해(2022년)부터는 국고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74세 사이의 고령자보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소요되는 의료비는 약 4배 많고, 장기요양비용은 약 1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2012년: 5% → 2014년: 8% → 2019년: 10%), 소비세 세수를 저출산·고령화 대책 경비에 충당한다고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재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의료보험 체계를 위한 재원 형성 문제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보험료도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따라 판단

일본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는 것에는 법률 또는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르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도 증세를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에 따른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일본 정치의 쟁점이 되어 왔다.

한편, 일본 국민건강보험법(国民健康保険法) 제81조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시행령(政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 또는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92년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회 답변을 통해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료는 형식적으로 조세는 아니지만,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를 미납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일반론을 밝힌 바 있다.

2006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내각법제국의 견해와 비슷하게 국민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해당)의 보험료에 대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는 일본 헌법 제84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가 강제징수 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미친다고 해석했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하위 법규에서 보험료의 부과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규정

되어야 하는지는 부과징수의 강제 정도 외에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특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 기준을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한 후에 보험료율은 지자체장의 결정에 맡기는 조례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부과기초가 되는 비용 및 수입의 예상액 등의 추계가 예결산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사회보험료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례에 대해 일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상반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사회보험료를 하위법령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재판소는 각 보험집단의 '민주적 통제가 미치는지' 여부를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건강보험은 우리와 달리 각 지역 및 직장 의료보험으로 분리되어 조합별로 민주적 통제장치를 둘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을 위한 공론을 이끌어내는 조세법률주의의 역할

오늘날 조세법률주의의 의미는 국가공동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의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이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 등 부과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세대 및 계층 간 분담방안에 관한 문제이며, 공동체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회보험료에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가 미친다고 해석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미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일본 국회도서관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는 행정입법에서 보험료율을 정해오다가, 2011년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공적 의료보험 재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사회보험료 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르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조세법률주의의 틀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7%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내국인 인구추계(기본 모형)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6.9%로 지금의 2배가 넘고 '60~80세 연령층'이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을 위한 국회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기초학술기본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기획세미나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다. 이 조사는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거버넌스, 공정성, 사회보장 등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관한 주관적 인식과 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장경태 의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공직생활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2종)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세미나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월 16일 '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집값 안정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 주택공약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은엽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가 '탄소중립시대의 주택 도시 공급방안'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택정책의 전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정수호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동영 한국부동산원 녹색기후지원부장,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이 주요국 기후 변화와 에너지 현황,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주택정책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토론회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7일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

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는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기초학술자문회의 설치 방안, 학술진흥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체계 정비 등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은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제도가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인문사회적 학술 역량을 보호 및 육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연구본부장은 기초학술기본법 제정과 기초학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 '국' 수준 이상의 예산기획 조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3월 18일 '게임이 교실을 깨우다!: 게임을 통한 학업 성취도 증진 효과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게임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철 대구진월초 교사는 수학에 게임을 접목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모습을 소개했다.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다문화 아동의 한글교육'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교육을 위해 기능성 게임을 적용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전했다.

또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최정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게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맞춤 게임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이해, ADHD 아동들을 위한 게임수업 프로그램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

권인숙·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된 배경과 현황에 대해 살피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전승희 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채희태 공주대 평생교육 박사과정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례 소개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

김종민·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3월 23일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플랫폼의 역할과 문제점,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박희덕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대표,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등이 플랫폼 수익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 해결과 수익 배분을 위한 협력경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룡 플랫폼 규제, 플랫폼 노동자·소비자 구제 정책, 국내외에 상정된 플랫폼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

어기구·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23일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 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됐으며 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산림파괴를 중단하고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던컨 브락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환경정책 자문위원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통한 산림파괴 대응 현황, 김수진 기후 솔루션 선임연구원이 우드펠릿, 우드칩, 팜유 사례 중심으로 목재제품 공급망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에는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이 참석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으로 보호

'고용보험법'(2021.7.1. 시행, 2021.1.5.일부개정)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 이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에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등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기반 종사자 등의 고용형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의 내용과 성과, 과제를 알아본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12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되고 다음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법'의 개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일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은 2021년 7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측은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주 대상 보험사무 온라인 교육 등 가입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며 “특히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해 약 43.6만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파악해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 8개월 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64.2만 명(2022년 2월 말 기준)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기반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는 2022년 7월 직종 추가 이후부터는 직종별 적용 확대가 아닌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개인별 고용보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관리체계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홍보 이미지

권순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은 “미래에 닥쳐올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고용안전망의 구축은 시대적 과제다. 주요 선진국들도 노무제공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함께 월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한 세법 개정 및 실시간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등 기반 마련도 추진돼야 한다. 또, 가입률이 낮고 역선택 문제가 있는 현행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에 기반한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 고영선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2021-11-25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2021-12-02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핫 스탬핑’으로 자동차를 더욱 가볍고 튼튼하게

이달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천한 기업 ‘㈜오토젠’의 차체 경량화 기술을 소개합니다. 오토젠은 차체 경량화 공법인 ‘핫 스탬핑(Hot Stamping)’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2020년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에서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오토젠을 찾아 핫 스탬핑 기술의 내용과 생산현황,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고강도 경량화 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차체 경량화 기술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체 경량화 기술은 탑승자 보호를 위해 안전하면서도 차량의 연비 및 주행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벼운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한다. 차체 경량화 기술 중 하나인 ‘핫 스탬핑 기술’은 얇은 두께로 더 높은 강도를 낼 수 있는 기법으로, 핫 스탬핑 부품의 강도는 기존 부품보다 3배 이상 강하다.

금속 소재를 900~950℃로 고온 가열하여 프레스 성형을 한 후, 금형 내에서 급랭시켜 가벼우면서도 강한 강판을 제조하는 핫 스탬핑 공법은 망간보론강 소재를 사용할 경우 기존 두께와 동일하지만 강도 150㎏/㎟(1,500㎫)인 초고강도 부품을 만들 수 있다.

핫 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고강도 자동차부품은 1984년 사브 자동차의 보강부품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 적용했고, 적용된 부품 수는 1987년 300만 개, 1997년 800만 개, 2007년에는 1억 700만 개, 2012년 약 3억 5천만 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핫 스탬핑, 전기·수소차의 경량화, 고강도 부품에 최적

1975년 창립한 오토젠은 지난 2006년 한국지엠, 포스코와 협업해 핫 스탬핑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 이후 주력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토젠은 핫 스탬핑 기술 상용화를 시작으로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2011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015년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전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오토젠은 한국지엠,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 마힌드라&마힌드라, 재규어 랜드로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경량화 차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임옥동 오토젠 신기술연구센터장은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 변화하면서 안전,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차체 경량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어, 핫 스탬핑 기술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며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수준 높은 연구환경을 구축해 자체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연구원이 연구 인력의 40%를 차지해 고객사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수소차 시대에도 차체 경량화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격변하는 자동차 산업 상황과 유럽 선진 회사의 기술 견제, 중국 등 후발 주자의 맹렬한 추격으로 우리나라 차체 부품 제조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오토젠은 우리나라의 핫 스탬핑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관련 기술의 완전한 국산화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핫 스탬핑 소부장 밸류 체인을 재정립하고, 산·학·연 컨소시엄 구축과 R&D 활동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핫 스탬핑 기술을 갖춘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오토젠은 인도를 핵심목표 시장으로 선정해 2018년 인도법인을 설립하고 대지면적 16,271m²(약 5천평)에 공장을 준공해 2기의 핫 스탬핑 라인을 구축했다.

임옥동 오토젠 신기술연구센터장이 핫 스탬핑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오토젠 인도법인은 폭스바겐, 재규어 랜드로버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돼 현지의 핫 스탬핑 부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인도를 거점으로 유럽 진출을 아우르는 해외 사업 로드맵을 수립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큰일"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다.

임옥동 신기술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은 3D 업종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으로 젊은 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워라밸 환경 조성, 근무 요건 개선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식 개선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근무환경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시흥: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국회,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 논의

행정안전위,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지원 관련 입장문 발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3월 7일 울진·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 관련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진화작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향후 복구 과정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산불 피해주민 주거지원 대책 마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속 교부 ▲강릉·동해 산불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산불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정부에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방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등 질의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3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한 강병원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 이전이 두 달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서 장관은 김병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대대 병력(400~500명)이 주둔지를 새로 지어 이동할 때 통상 3~5년이 걸리지 않느냐고 묻자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국방부 이전에 따라 남태령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합동

참모본부 청사 건축비와 관련, “1천200억 원은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 추산은 좀 다르다.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와대가 발표했듯 국방부, 합참과 모든 절차를 준비한 뒤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며 “안보불안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집무실을 옮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원식 위원(국민의힘)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역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2012년, 2017년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은 애로사항이 많으니 용산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2개월 만에 옮겨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한 것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위원(국민의힘)이 “합참의 평시 작전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실 때 안보 불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박정환 합참차장은 “합참차장으로서 합참의 현행 작전,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위원(국민의힘)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관련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어제 용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주재하셨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위협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전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제안 사항을 다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주변 미군 기지를 6월쯤 반환받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환받고 환경오염 정화 과정을 겪는데 일정이 녹록지 않고 (주한미군 측과) 협상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헌법적 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국회, 제게는 최고의 직장이죠"

허병조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일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교관을 꿈꾸던 저는 법대에 진학하면서 주위 분위기에 이끌려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사법시험 별거 아니네"라는 '고시 무시·모독죄'라는 죗값을 치르는 데 7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방황하던 중 1998년 입법고시 법제직이 신설되면서 서둘러 응시한 시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국회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더이상 인연이 없을 듯했던 사법시험도 몇 개의 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되면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5개월 동안 주경야독한 덕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국회로 복직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제게 법률전문가라는 권위를 부여해주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국회 생활과 국회의 업무 내용은 처음부터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을 좋아했는데, 국회는 헌법 조문·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관례가 없거나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을 때 해석의 원천으로 헌법이 인용되거나 헌법적 지식이 요긴하게 쓰이는 곳이어서 헌법적 주제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법학 전공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직장이었습니다.

Q.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군사법원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루는 법률은 국가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많고 조문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관기관이 상대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 회의 개최 및 내용은 항상 뉴스거리가 되는 위원회입니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소관기관에 대한 법률안 심사, 예산안·결산 심사, 국정감사, 주요공직자의 인사청문, 현안질의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사와 표결 전에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가 맞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최근에 그 권한의 존치 여부나 심사범위를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Q.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저는 대법원에 관련된 법률안, 예산안 등 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차별금지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집단소송법안',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겸무를 통해 인사청문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동물보호법', '병역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포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2011년 국회 법제실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이 난 법률에 대한 국회 입법의무 해태'라는 언론 기사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한 후 국회의 입법방향을 제시해 직접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국회 법제실 내에 위헌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법제연구과' 신설로 이어졌고, 초대 과장으로 근무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위헌·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법률의 개정 히스토리를 책자형태로 발간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국회직원에게 강의를 통해 공유한 것도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제도 개혁 TF'에 참여해 현재 공직 부적격 사례로 지적되는 사유를 병역기피, 위장전입, 조세탈루 등으로 유형화하고,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등을 검토해 인사청문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변호사자격으로 헌법소송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A. 국회공무원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등을 심사할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국회공무원의 자세를 퇴직하는 순간까지 견지하고 싶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국회도서관 70주년

"전쟁 속에서 시작한 국회도서관, 디지털혁신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으로 날다"

국회도서관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20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경남도청 무덕전에 설치된 국회도서실에는 7개의 서가에 3천600여 권의 책이 마련됐다. 1951년 9월 본회의에서 윤택중 의원은 "전쟁에서 문화전(戰), 사상전(戰)을 이야기하는데, 정신무장은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9월 10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우선 단 한 칸의 도서실이라도 설치해 국내외 신문 등이라도 입수하자"는 국회도서실 설치 결의안으로 이어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도서관을 만들고자 한 것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 엄중한 결단이었다.

1953년 전쟁이 끝나고 국회가 서울로 복귀하면서 의사당에 자리한 국회도서관이 입법부의 독립기관이 된 것은 1963년 '국회도서관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동안 입법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해 7만 건이 넘는 '의회·법률정보 회답'을 제공했고, 국회의원 정책활동 자료 3만 건과 입법부 보도자료 10만 건을 정책정보DB와 보도자료DB로 구축하는 등 국회 의정지원기관으로서 의회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1993년 일반인에게 부분 개방된 국회도서관은 주말개관과 야간개관에 이어 2016년 청소년 자유이용제, 2018년 개인도서반입 허용 등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도 성장해 왔다. 국가 지식정보의 축적기관으로서 국내외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온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일반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전자자료를 포함해 750만여 권에 이른다. 개관 70년 만에 2천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기관은 5천 800곳이 넘고, 지금까지 구축된 원문DB는 3억 5천만 면 규모다.

한편 국회의 기억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은 2009년 국회기록보존소가 사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무처에서 이관된 이후 입법부의 기록과 역사를 지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5년 해공 신익희 선생 전시회를 개최했고, 홍진 의장 후손에게 임시의정원 관인을 수집하기도 했다. 2016년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발간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국회의장 국외 수령 선물을 관리하고 있다.

최신기술 활용해 지식정보 제공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

개관 7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은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최상의 의회도서관으로서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70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의정정보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의회가 중장기 국가의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의제를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통계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구현될 국가전략 차원의 정보와 데이터는 미래 전망까지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지식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이 운영 중인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는 매일 30만 건의 자료를 분석해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작된 일본법 AI 번역 서비스는 다른 언어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지능형법률검색시스템에서는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 언어로도 법률 검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통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디지털 빅데이터 연구센터'도 준비 중이며, 모든 입법·법률, 학술정보는 '데이터셋'으로 변환되어 데이터 기반 도서관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게 된다.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융합콘텐츠 서비스는 지능형 미래도서관의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국회도서관은 의회서비스를 넘어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로 나아가고 있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국회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람과 세상을 잇고 있다. 3월 31일 국회부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전쟁 속에서 씨앗을 틔웠던 국회도서관은 70년 만에 공간적으로도 확장됐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자리한 국회부산도서관은 기존의 지방의회정보센터와 법률정보센터를 보완·확장한 지방의정서비스 중심의 의회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연구원, 민간기업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성장하는 지역 특화 공공도서관으로 꾸려진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공공도서관이 될 것이다.

그동안 도서관이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보관·전수해왔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료로 서로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지식정보를 수집해 국회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류의 지적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세에 전승한다는 국회도서관의 사명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의 70년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융합콘텐츠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서로를 연결하는 장면을 메타버스에서 체험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질지 모른다.

유럽의회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국회 운영의 핵심과제는 서울과 세종, 두 청사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지원제도를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다. 이처럼 거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국회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유럽의회다. 유럽의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벨기에의 브뤼셀, 룩셈부르크의 수도 룩셈부르크 세 곳에 청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청사가 분산된 상태로 20년 이상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회의 운영 방식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국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회 개황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로서 집행위원회(Commission), 이사회(Counsil)와 더불어 유럽연합을 이끌어 가는 핵심기구다. 유럽의회는 입법권, 예결산 심사권, 집행위원회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시민들의 직접·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총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부의장 등으로 구성되는 집행부(Bureau), 우리나라의 교섭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인 정치그룹(Political group), 외교·경제·금융·예산 등 27개의 위원회(Committee), 사무처(Secretariat)가 유럽의회를 운영하는 주요 기구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의원 705명을 제외하고 유럽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9천947명인데, 이는 사무처 직원, 의원 보좌직원, 정치그룹 사무국 직원을 모두 합산한 규모다.

유럽의회의 청사 운영

유럽의회의 청사 운영 방식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트라스부르에서는 본회의가 열리며, 브뤼셀에서는 본회의가 일부 열리기도 하나 대부분 각

이주홍 서기관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스트라스부르 청사, 브뤼셀 청사, 룩셈부르크 청사(왼쪽부터)

종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다만, 두 청사 모두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가 가능하도록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

룩셈부르크는 사무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근무인원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은 위원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고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소재한 브뤼셀에서 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따라서 의원 보좌직원도 브뤼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무처 직원도 회의지원 인력이 주로 브뤼셀에 근무함에 따라 브뤼셀이 전체적으로 근무 인력이 가장 많으며 7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룩셈부르크는 사무처의 인사, 재무, 법무 등 회의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가 소재하며 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한다. 본회의장이 있는 스트라스부르는 본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보안, 청사 관리, 홍보관 운영 등 직원 100여 명만 근무한다.

유럽의회 운영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은 본회의 기간에 브뤼셀, 룩셈부르크에서 근무하는 의원, 직원이 대규모로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동을 수용하기 위해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동일한 규모의 의원사무실이 제공된다. 일반 직원들의 경우 간부급 직원은 스트라스부르에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나 대부분의 직원은 개별 사무실은 없고 공용 업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 운영과 이동 지원 제도

스트라스부르에서 연간 12회의 본회의 기간(plenary session)이 열리는데 평균적으로 1개월당 4일 정도 본회의가 개최된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주 또는 2주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특기할 점은 유럽의회는 연간 의사일정을 1년 전(통상, 전년도 6월)에 결정하는데, 이 의사일정에는 본회의, 위원회, 정치그룹 회의, 지역구 활동 등 모든 의정활동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의사일정은 집행부와 정치그룹 대표 등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클라우스 벨(Klaus Welle) 유럽의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의사일

브뤼셀 위원회 회의장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장

정 준수 정도는 100%에 가깝다고 한다.

유럽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용 지원 측면에서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세기차 제공, 공항·기차역 픽업서비스, 각 청사간 셔틀버스 운영 등 이동편 제공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국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유럽의회는 청사가 분리된 상태로 운영된 역사가 길고 의회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참고할 사례가 다양하다. 다만, 유럽의회의 역사 및 정치적 배경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청사 운영 측면에서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모두에 본회의, 위원회가 가능하도록 회의장이 많이 설치된 점, 두 도시에 동일한 의원사무실이 설치된 점은 회의 및 의정활동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유럽의회는 청사 소재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어 우리 실정에 부합한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회의 운영 측면에서 유럽의회는 의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최대로 높이고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회의 진행, 행정부와의 소통,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의 모든 부문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의회 청사가 분리되어 있고 의원들의 지역구가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자리 잡힌 시스템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유럽의회 사례는 서울, 세종으로 청사가 분리되었을 때 효율적 의회운영의 핵심이 예측가능성에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 밖에 유럽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다양한 이동지원 제도들의 경우 서울-세종 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회의 운영 사례는 앞으로도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의 큰 방향에서부터 세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세종의사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보다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개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Global Parliamentary Focus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I
국회 간행물 표지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회도서관
디지털 시대의 정당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한민국국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 치른 국회채용시험(입법고시)

지난 3월 12일 제3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치러졌다. 입법고시는 채용계에서 관리하는 채용시험 중에서도 규모가 큰 시험이다. 최종 14명을 선발할 이번 제38회 입법고시에는 2천941명이 응시해 2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법고시와 같은 대규모 시험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공정성·객관성·엄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입법고시는 시험 전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8만 3천66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실시돼, 철저한 방역관리와 수험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수립… 확진자 시험 기회 보장

채용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각종 기관 및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했다. 정부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공인회계사시험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코로나19 대응 준비 상황을 공유받고 국회사무처만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수립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는 3천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 중 코로나 확진자 명단을 받은 뒤, 이들에게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격리중인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거나 시험 응시를 목적으로 당일에 한해 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각 부서와 직원들의 협조 역시 필요했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령한 확진자 명단은 120명에 달했고 이 인원이 모두 시험 응시의사를 밝힐 경우 당초 준비했던 생활치료센터(서울남산유스

이문범 사무관
인사과 채용담당

방역복을 착용한 별도시험장(의정관) 감독관

호스텔)에서의 별도시험은 센터의 수용인원 한계를 초과해 수험생에게 자칫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인해 확진자와 검사대기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진자 이송에 협력해야 할 전국의 각 보건소는 업무과중으로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연락과 대응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고 결국 국회의정관을 확진자 별도시험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여러 부서의 협조로 국회의정관을 별도시험장으로

국회의정관에 위치한 의정연수원은 흔쾌히 시설사용에 협조했고, 의회방호담당관실은 확진수험생 동선을 관리해줄 직원들을 배정해줬다. 운영지원과는 식당(쿠치나후) 영업을 중단했고 국회경비대는 응시생들의 국회출입에 협조했다. 또 국회의정관 내 예산정책처, 방송국 등 직원들은 시험당일 출입을 자제해 큰 사고 없이 시험을 진행했다. 결국 응시의사를 밝힌 확진 수험생 31명이 국회의정관에서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서울시내 6개 중·고등학교에 마련된 일반시험장에서도 국회 직원들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긴 시험시간동안 450명의 시험감독관은 수험생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며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1.5배, 1.7배 시간 연장 시험실의 감독관들은 늦은 저녁시간까지 수고를 해주었다. 본부요원들은 시험장 출입시 발열체크, 휴식시간 중 화장실 혼잡도 관리, 별도시험장 응시생 동선관리 등 시험장 현장에서의 방역관리에 힘썼다. 특히 이번 입법고시부터는 일반시험장에도 각 3실씩의 별도시험실을 마련해 코로나19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발열자나 해외입국격리자, 자가진단키트 양성자 등 특이응시자를 출입시 구분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줘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임시로 확인했다. 그 결과 11명의 특이응시자 중 6명이 자가진단키트 상 양성으로 판정돼 제1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고, 나머지 5명의 특이응시자는 음성으로 판정돼 제2별도시험실에서 응시했다. 발열·기침 등 이상증세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시험감독관이 별도시험실 응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비해 설치한 제3별도시험실은 철저한 방역대책과 사전관리 덕분에 이용되지 않았다.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성공적 시행은 채용계 직원뿐 아니라 국회 모든 직원들이 함께한 결과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믿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능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일들도 즐겁고 자신있게 해나가겠다.

한편 지난해 4월 24일 실시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 속에 진행됐다.

NEWS

박병석 국회의장, 싸이솜폰 라오스 국회의장과 영상 회담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3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싸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과 영상 회담을 갖고, 라오스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라오스의 전기, 광산,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국공항공사가 맡았는데 공항 건설도 한국이 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싸이솜폰 의장은 "한국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의장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라오스의 공안부 병원,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보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의원친선협회·의회 사무처 간의 상호 정기 방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 참석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이 3월 17~1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2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회복의 추구'를 주요 의제로 총 9개의 세부 세션이 개최됐다. 각 세션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최신 현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평가 등 OECD 주요 현안에 대한 OECD 사무국 관계자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극복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 이후 이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오고 있다.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SW)' 개최

'제66차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영

상회의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로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각국 의회대표들은 '기후변화, 환경·재난위험경감 정책 및 사업에서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강화 달성'을 의제로 기후행동에서의 여성리더십과 정치참여, 성인지적 기후행동을 위한 법·정책 개혁과 녹색 의회 경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영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팬데믹 시대의 피해는 성차별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사례로 팬데믹 시대에 우울과 자살이 2030 여성에게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한 점, 어린이집 등 사회돌봄 기관이 셧다운 되면서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성 평등한 참여를 끌어내고, 기후 행동과 저탄소 경제 구축 프로그램 등에서 여성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와 가정 돌봄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UN 여성지위위원회 중 의원회의'는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의 결과인 '북경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각국 의회의 의견 교류 및 토론을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매년 2월 말 ~ 3월 중순경 UN본부(뉴욕)에서 개최되어 왔다. 다만,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하게 됐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위촉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3월 2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으로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번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는 배정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자문위원은 언론관련 학회, 협회·직능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민간위원과 4명의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3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대한민국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천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임에도,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

NEWS

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라며 "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됐다.

새롭게 위촉된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도 1기에 이어, 국회 출입기자 제도 및 취재질서 유지 등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첫 여성 중국 주재관 파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3월 4일 채미강(입법고시 23회) 서기관을 중국 주재관으로 임명했다. 중국 주재관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국회사무처가 1995년 중국 주재관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처음이다.

채 서기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영국 런던에서 입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07년 국회사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정연수원, 운영지원과, 법제실, 정보위원회 등에서 업무능력을 쌓았다. 채 서기관은 국회에서의 근무경험을 살려 한·중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국회와 중국 내 동포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급변하는 한·중 관계 속에서 여성 외교관들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현재 미국(워싱턴·뉴욕·LA),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총 8개 국가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국가전략'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1일 팩트북 2022-1호(통권 제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을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핵심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국가전략 관련 내용과 발전 방향 등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전략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대내외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설계도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는 국가의 안보, 환경, 기술, 경제, 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지방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선도 역량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협의의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제,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 제시가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국가전략에 관한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2022년 연례협의 실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지난 2월 22일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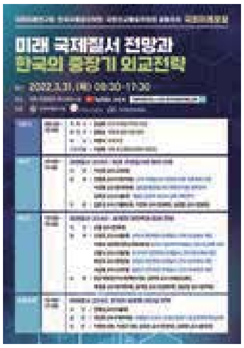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수석이사 등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 및 분석관들과 한국판 뉴딜정책의 재정적 영향,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평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에도 무디스 연례협의단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대해 비대면으로 논의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와 정치 양극화’ 발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11일 제20대 대선 이후 주요 과제로 부각된 국민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담은 ‘국민통합의 시대적 과제와 정치 양극화’(‘NARS INFO’ 제17호)를 발행했다. 본 ‘NARS INFO’ 에서는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외국 지도자의 국민통합에 대한 주요 언급을 소개하며, 시대적 상황과 문제의식의 차이에 따라 그 강조점이 각각 국민단결, 불평등 해소, 분열·증오에 대한 문제의식 등으로 조금씩 달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갈등과 관련한 국내외 조사결과를 일러스트와 다이어그램 등으로 시각화해 제시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사회갈등 중 정치적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고, 정책적 지향점 이전에 기본적 사실인식 불일치에서 사회갈등이 비롯된다는 설문결과도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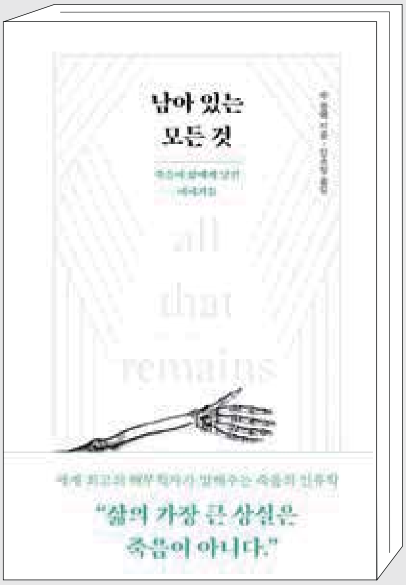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제4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강대국 간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경쟁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조정 국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이 함께하는 포럼이 외교전략을 수립하는 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이광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토론은 세션1 ‘미래질서 2040: 미래 국제질서와 힘의 이동’과 세션2 ‘미래질서 2040: 세계의 대전략과 미래 전망’, 종합토론인 ‘미래질서 2040,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전략’ 순으로 진행됐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와 손열 연세대 교수가 세션1과 2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고,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각계 전문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아 있는 모든 것



저 자 수 블랙
역 자 김소정
출판사 밤의책
출판일 2021. 10.

죽음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음의 실체를 온전히 알 수 없다. 매일 죽은 자들을 만나고 죽음이 일어나게 된 방식과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법의학자에게도 이 질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죽음은 늘 곁에 있기에 친숙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한꺼번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 무엇이다. 법의학자들은 자신의 앞에 누워있는 시신을 통해 끊임없이 죽음을 느끼고 죽음이 주는 교훈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므로, 죽음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동시에 죽음을 깊이 존중한다. 이 책은 영국의 저명한 법의인류학자인 저자가 오랫동안 죽음과 함께 일하며 깨닫게 된 삶의 지혜들을 독자에게 전하는 소박하고 솔직한 언어들의 모음집이다.

첫 장은 저자가 해부학과 첫 만남을 가졌던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의 구조를 익히던 시간들을 사랑했으며, 대학에서 첫 해부학실습을 하면서 사람의 해부학이 간직한 아름다움에 강렬하게 매혹되는 과정에 대해 저자는 ‘죽음의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표현하고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의학도가 있으나, 법의학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일을 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저자처럼 죽은 동물의 신체구조에 담긴 논리정연한 자연의 질서가 될 수도 있고, 흥미진진한 법의학 드라마일 수도 있으며, 학창 시절 우연히 청강한 법의학 강연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의도치 않았던 선택과 경험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종종 경

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그 선택과 경험에는 언제나 무의식적인 자신의 성향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지향해왔으며,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자들을 마주할 때 더욱 편안함을 느꼈다고 독백하고 있다. 돌이켜볼 때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저자가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자신의 삶의 궤적을 법의인류학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긴 여정으로 결론지었을 때, 나는 퉁명스러움 속에 다정함을 감춘 듯 보이는 낯선 중년의 백인 여성에게 상당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분쟁과 대량재해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의 후반부에서 나는 공감의 단계를 넘어 저자의 마음에 깊이 이입하게 되었다. 1999년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 사이에 벌어진 참혹한 전투와 민간인에 대한 살상현장을 기소하기 위해 영국 법의학팀은 발칸반도에 위치한 코소보의 작은 마을로 파견됐다. 무더위와 폭발의 위험 속에서 몰살당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들을 수습하는 일, 시신의 조각 속에서 전쟁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법의학 증거들을 찾아내는 일, 시신의 이름을 밝혀내어 무사히 가족의 품에 돌려주는 일, 정치인과 언론매체의 관심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시신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일, 이것은 유일하게 법의학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고, 법의학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로운 일일 것이다. 저자가 코소보에서, 인도양 쓰나미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할 때 나의 마음속에도 서늘한 바람이 스쳐갔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이 일어났던 진도 팽목항의 컨테이너 사무실, 어둠 속에 무심하게 굽이치던 파도와 모래바람에 펄럭이던 하얀 천막도 떠올랐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법의학자는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나 자신에게도 그러했듯 한 법의학자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저자는 장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발칸전쟁처럼 세계를 바꾼 사건이 자기 자신의 경험이 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다. 어떤 사람이 되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절대로 그 전과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실종된 민간인을 찾기 위해 묘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고대 유골의 얼굴을 복원하며 경찰을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에도 앞장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며 한편 부러움을 느꼈다. 유명 범죄소설 작가들과 함께 100만 파운드 모금운동을 벌여 대학교에 새로운 시체보관소를 만든 성공사례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이미 1800년대에 검시관법이 제정되고 검시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영미법계 검시관제도의 기원이 된 나라다. 죽음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망자의 권리를 살아있는 자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유구한 전통과 문화의 산물일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법의학은 비록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법의학의 학문적 중요성을 인식한 선구자들의 헌신에 의해 척박한 대지에 꽃이 피듯 현재의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법의학이 발전할수록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다.

글 정하린(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나는 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

윤휴(尹鑴: 1617~1680).

정(鋿)자로 내 이름을 지은 것은 부친의 본 생각이 아니었다. 세 살 때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때는 단지 '두괴(斗魁)'라는 아명을 부르도록 하셨을 뿐이다. 어릴 때는 아명을 부르다가 관례를 하면서 본 이름을 짓고 자(字)를 지어 부르는 것이 우리의 풍속인 것이다. 어머니가 전하는 말로는 부친이 나의 이름을 지으려고 정(鋿)자를 골라 놓고 어떤 이에게

"이 글자로 내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 한다. 그런데 이 글자의 본 음이 '갱'이어서 발음이 좋지 않다. 다른 음인 정(貞)으로 부를 경우 괜찮지만, 한편으로 이정(李挺)이라는 자의 이름과 같아지는 게 문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의 이름과 같은 발음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정은 당시 조정의 관리로서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시키는 폐모론을 주장한 자여서 부친이 싫어하셨던 것이다. 아! 이러한 말씀에서 선친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실 때 나는 어린아이였고 형제들이나 집안의 어른 중에도 선친의 뜻을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후 정(鋿)자의 이름을 쓰며 산 지 25년이 지나도록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향이 분명하셨던 부친의 마음이 나 때문에 막히게 되었으니, 이러고도 선친의 뜻을 잘 계승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식으로써 부친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진 자의 마음씨가 아니다.

이전에 나의 친구 상여(相如) 이여우(李如愚)가 나에게 여러 번 이 점을 말해주었지만 나는 어리석어 잘 알아듣지 못했고, 차츰 식견이 생기고 부터는 마음에 편치 않아 몇 번이나 남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화는 겉돌고 뜻은 분명치 않아서 선친의 뜻을 또렷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은 고치는 것을 어렵게 여기면서 '고쳤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또한 선친의 본의를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통에, 선뜻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관해(觀海) 이민구(李敏求: 1589~1670) 선생께 작명을 부탁해서 '징모(徵謨)'로 바꿨다. 그러나 얼마 뒤에 나의 선친께서 '금(金) 자 변의 글자로 형제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는 주자(朱子)의 오행 상생(五行相生)의 법을 따르려고 한 것으로서, 선친의 이름자 '효전(孝全)'에 토(土) 자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모'란 이름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나의 이름을 고친다는 데서 오는 슬픈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는 것을 잊은 적은 없지만 오늘날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불현듯 누가 나의 마음을 깨우쳐 준 듯 한 생각이 들고, 감개하며 슬픈 마음이 솟구치면서 이름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누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름을 고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에

게 물어 질정을 받고 조상의 사당에도 고하려고 하였다. 그리하면 선친의 평소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나의 불효의 죄도 조금이나마 고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건강이 나빠져서 조상께 제전(祭奠)을 올리고 고유(告由)하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나의 친구 수부(秀夫) 권준(權儁)이 보내 온 편지에, '병세가 심하더라도 이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구절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고치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히 한으로 남을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 말이리라. 그의 생각이 참으로 후덕한 것이어서 이 또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자서(字書)에서 '휴(鑴)' 자의 뜻을 살펴보니, 그 뜻이 '큰 종[大鍾]'이라고도 하고, '솥[鼎]'이라고도 하였다. 글자를 분석해 보았다. 휴(鑴)자는 금(金)자 변에 휴(巂)자를 따랐는데 '모양은 말처럼 생겼고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특이한 짐승'을 휴(巂)라 부르는데, 매우 큰 짐승[大獸]이다. 휴(鑴)자가 큰 종의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내 이름으로 써온 '윤정(尹鍞)'의 정자를 휴(鑴)자로 바꾸고자 하는데, 큰 종[大鍾]이라는 뜻을 택한 것이다. 큰 종은 매우 귀중한 물건이다. 그 물체가 무겁고 바탕이 강하며, 소리가 웅장하고, 그 쓰임은 귀신과 통하고 인심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구중궁궐에서 종을 치면 궁 밖에까지 들린다. 그래서 '중용'에서 군자가 '진실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고 탄식한 것이다. 더구나 속은 텅 비어 사람들이 환히 들여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론 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다. 이상에 열거한 것이 종이 갖춘 덕목(德目) 들이다. 그러나 나의 품덕(品德)을 생각해 보면 종만 못해서 이 글자를 이름으로 택함에 감당키 어려운 점 들이 있다. 그러나 '고명사의(顧名思義)'라는 옛 말이 있다. '자신의 이름자를 보면서 그 뜻에 내가 맞춰나갈 것을 생각한다'는 뜻인데, 자신의 행실을 경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내 이름자의 뜻'인 큰 종이 갖는 여러 품덕들은 부족한 나에게는 참으로 약석(藥石)과도 같다. 고황(膏肓)과 골수와 장부까지 파고든 병을 씻어내는 독한 약이 되고, 뼈를 깎아내는 칼이 되고, 혈맥과 근육을 원활하게 하고 뭉친 병 덩어리를 부숴내는 침의 구실을 해줄 것이다. 이러한 덕목들은 힘을 다해 받아들여 실천하되, 늘 나의 부족함을 알고 감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들이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름자의 의미를 글로 써서, 옛사람들이 몸에 환옥(環玉)과 패옥(佩玉)을 차거나 욕조(浴槽)에 글을 써놓고 관성(觀省)의 자료로 삼았던 것에 가름하고자 한다.

아! 슬프다. 나는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살아 계실 때는 명을 받들지 못했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 때에 그 뜻을 맞춰드리지 못했단 말인가. 어쩌면 이 말이 죄가 되어 나의 불효의 죄를 더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숭정(崇禎) 신사년(1641: 인조 19) 11월 28일에 쓴다(白湖全書 卷26 改名說).

윤휴(尹鑴)는 조선 후기의 저명한 산림(山林) 출신의 학자이다. 호는 백호(白湖), 본관은 남원이다. 병자호란 후 시종일관 북벌(北伐)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독서와 학문으로 평판이 높았다. 20세 즈음에는 사방에서 교유를 희망하는 선비들이 찾아 왔고 '나의 삼십 년 독서가 가소롭게 느껴졌다'며 감탄한 사람도 있었다. 이 글은 자신의 개명에 관한 짧은 글이지만 그의 성격과 지향점을 이처럼 잘 드러낸 것은 보지 못했다. 너무 쉽게 이름을 바꾸는 요즘의 세태에 비춰 이름이 갖는 의미를 반추할 좋은 자료다. 인물의 생애와 평가는 지면의 한계로 생략한다.

글 신승운(한국고전번역원장)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한 키이우(키예프) 루시와 코자크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초원 지대 서쪽 끝은 과거 '킵차크 초원'이라고 불리던 카스피해 및 흑해 북부 지역으로, 고대 스키타이가 대제국을 세웠던 곳이다. 그 중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드네프르강은 8세기 말부터 시작된 '바이킹의 시대(Viking Age)'의 주 무대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류리크(Ryurik)라는 바이킹(당시 용어로 바랑기Varangi) 출신의 인물이 862년경 이주해 러시아 북서부의 도시 노브고로드(Novgorod)를 건설하고 국가를 건립한다. 그런데 882년 그의 계승자 올렉(Oleg)은 남쪽 드네프르강 일대를 정복하고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이주하게 된다. 이 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삼고 있는 키이우 루시(Rus')다.

10세기 중엽 동유럽의 강국으로 부상

루시 왕조는 북유럽 발트해와 흑해 북안 사이 무역으로 번성했다. 10세기 중엽 군주였던 스뱌토슬라브와 그의 아들 볼로디미르(러시아어로 블라디미르) 시기에는 돌궐 제국의 후예로 카스피해 북부 볼가강 유역에 위치해 있던 하자르(Khazar) 왕조를 격파하고 동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볼로디미르는 988년 비잔틴 제국

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이후 키릴문자와 기독교 정교회(Orthodox Church)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방에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후대 역사가들에 의해 미화되었던 것처럼 키이우 루시가 '유럽'의 '기독교 국가'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자료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루시의 대공(大公)들은 당시 '킵차크 초원'의 유목민들과 정치적, 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루시의 대공들은 유목민 집단과 통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수의 유목민들이 루시의 대공 편에서 다른 부족 집단과 전쟁을 벌였다. 루시 사회 속 초원 유목 문화의 영향은 오늘날 전해지는 '이고리 원정기'와 같은 문학 작품 속에서 확인된다.

1240년 몽골제국에 의해 몰락한 루시

이렇게 번영을 누리던 루시는 12세기 십자군 원정으로 비잔틴 제국과의 교역이 약화되면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1240년 몽골제국의 원정군이 수도 키이우를 초토화시키면서 몰락하고 만다. 몽골제국의 동유럽 원정 후, 킵차크 초원에는 칭기즈칸의 첫째 아들 주치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금장칸국(金帳汗國, 영어로는 The Golden Horde)이 건설됐다. 금장칸국의 군주들은 소공국으로 분열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지역 도시 각지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다. 초기에는 바스칵(Basqaq)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해 직접 징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현지 유력 대공(大公)으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 금장칸국의 칸에게 징세권을 받아 세금을 징수하며 주변 도시국가들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모스크바와 인근 도시들이 소속된 블라디미르(Vladimir) 공국이었다. 1389년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이름을 바꾼 이 국가는 1480년 군주 이반 3세가 금장칸국에 더 이상 신종(臣從)할 것을 거부하고 금장칸국의 군대의 침입을 격퇴하고 나서야 이른바 '몽골-타타르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옛 키이우 루시가 있던 지역은 주변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서 분열됐다. 드네프르강 서부 지역은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대공국이 연합해 결성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동남부 지역에는 몽골 금장칸국의 후예들이 창설한 칸국들이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크림(Krym) 반도 인근에 수립된 크림칸국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보호국으로 18세기까지 존속한다.

17세기 초 게치만의 지도 아래 국가 형성한 코자크인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집단이 바로 코자크(러시아어로 카자크)였다. 이들은 다수가 폴란드-리투아니아 지배 영역의 농민 출신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찾아 드네프르강 하류 및 돈강 유역으로 이주해 자치 집단을 형성했다. '코자크 기병'이라는 용례에서 알 수 있듯, 코자크인들은 우크라이나 남부 킵차크 초원에서 거주하는 유목민들의 습속을 받아들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키이우 루시 시대 건축물 성소피아 대성당

이러한 코자크인들은 17세기 초 우두머리인 게치만(영어식 표현으로 헤트만Hetman)의 지도 아래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1648년 당시 게치만이었던 보그단(영어식으로 보흐단Bohdan) 흐멜니츠키(Khmelnytsky)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맹의 지배 아래 있던 드네프르강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정교회를 신봉하던 주민들이 호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흐멜니츠키 휘하 코자크의 봉기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흐멜니츠키의 반란과 카자크 국가의 설립은 이를 진압하기 위한 폴란드-리투아니아 측의 공격을 불러왔다. 이에 맞서기 위해 흐멜니츠키는 1651년 러시아 측에 보호를 요청한다. 3년간의 협의 끝에 1654년 페레야슬라프(Pereyaslav) 회의 혹은 조약이 체결됐다. 당시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측 공세에서 벗어나고자 체결한 조약이지만, 이후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는 폴란드와의 전쟁 끝에 1667년 드네프르강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드네프르강 하류에 존재하던 코자크 국가는 1775년 해체되고 만다. 러시아는 이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합동으로 폴란드를 분할해 영토를 서쪽으로 확장하고, 1787~1792년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크림칸국을 병합해 흑해 남부까지 차지하게 된다.

소련 해체 직전 주권 선포하고 다음해 독립한 우크라이나

비록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9~12세기 루시 왕국의 번영과 17세기 코자크인들이 보여준 독립에 대한 열망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 속 깊이 각인됐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가 무르익으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도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의 민족문학가로 알려진 이반 코틀랴레브스키(Ivan Kotliarevsky)의 시 '에네이다'는 최초의 근대 우크라이나어 문학작품으로 평가되는데, 바로 코자크인들의 용맹함을 노래한 것이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보다 수십 년 앞서 세계 최초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천명한 1710년 코자크 지도자 필립 오를릭(Pylyp Orlyk)의 헌법도 재조명됐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의회는 키이우 루시 및 코자크 시기 정치회의를 일컫던 '라다(Rada)'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취임할 때 코자크 군주가 했던 것처럼 '불라바(Bulava)'라는 철퇴를 높이 드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독자적인 정체성을 간직한 우크라이나인들은 1917년 공산혁명 직후 러시아에 대한 독립 운동, 1990년 소련 해체 직전 우크라이나의 주권 선포 및 1991년 독립을 이어갔다. 키이우 루시와 코자크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봄의 전령사 **산수유**

잎이 나기 전 꽃을 먼저 피우는 산수유가 국회 곳곳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한줄기에 20~30개의 꽃잎이 빼곡하게 달려있는 산수유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활짝 핀 꽃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새봄 맞으세요.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회의록으로 보는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의사당 건물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짠 예산안을 의원들이 심의·확정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능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중요 사건이나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심의·의결하는데 제21대 국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그리고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몇몇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지금의 이 상임위원회들 중에 제14대국회 때 특별위원회로 시작해 제16대국회 중간에 상임위원회로 바뀐 경우가 있어 흥미롭다. 1994년 여성특별위원회[1]로 출발해 2002년 상임위원회 체제로 재탄생해, 올해로 스무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여성가족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회의록에서 찾아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제일 먼저 2000년 12월 2일에 열린 제215회 정기국회 제3차 여성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상임위 개편 추진에 관한 건이 상정되는데, 당시에는 여성특별위원회였으므로 위원회 명으로 건의서를 작성·채택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회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성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소위원장 전재희** 여성특별위원회의상임위개편추진소위 위원장 전재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

제1차 소위원회를 열어 여성특위의 상임위 개편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여성부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조만간 의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이를 계기로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성특위위원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추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원장 명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법개정안의 발의 경위 및 협조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①항에 17호로 여성위원회 조항이 신설[2]되고 그 소관은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반영되기에 이른다.

---

1) 국회법제46조의2(여성특별위원회)①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1994.6.28.]

2)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①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7. 여성위원회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002. 3. 7. 일부개정]

또한 여성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록과 2002년 4월 16일 여성위원회 1차 회의록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회의장에서 의사와 관련하여 말한 것을 속기사들이 기록한 것을 회의록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회의록 본문 내용 못지않게 회의록 표지 부분에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표지: 여성위원회

표지: 여성특별위원회

먼저 2002년 4월 16일 1차 여성위원회 회의록 표지를 보면 위원회 명칭에서 '특별'이 사라진 것은 당연하겠으며, 회의가 열린 장소가 여성위원회 회의실이다. 불과 두 달 전 마지막 회의 장소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같이 사용하던 국회 본관 501호였다면 이제 여성위원회 전용 회의실이 생겼다는 것을 두 회의록의 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의사일정이다. 여성위원회는 제일 첫 번째 회의에서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3]을 상정하고 소관 법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기에 이른다. 여성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법안이나 청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다.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부분은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에 열린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4]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두 안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안설명하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5]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조 4115억 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7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지출 대비 약 0.23%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2022년도 예산은 1조 5천억 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가끔 성인지 예산[6]과 같은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여성위원회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회의록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4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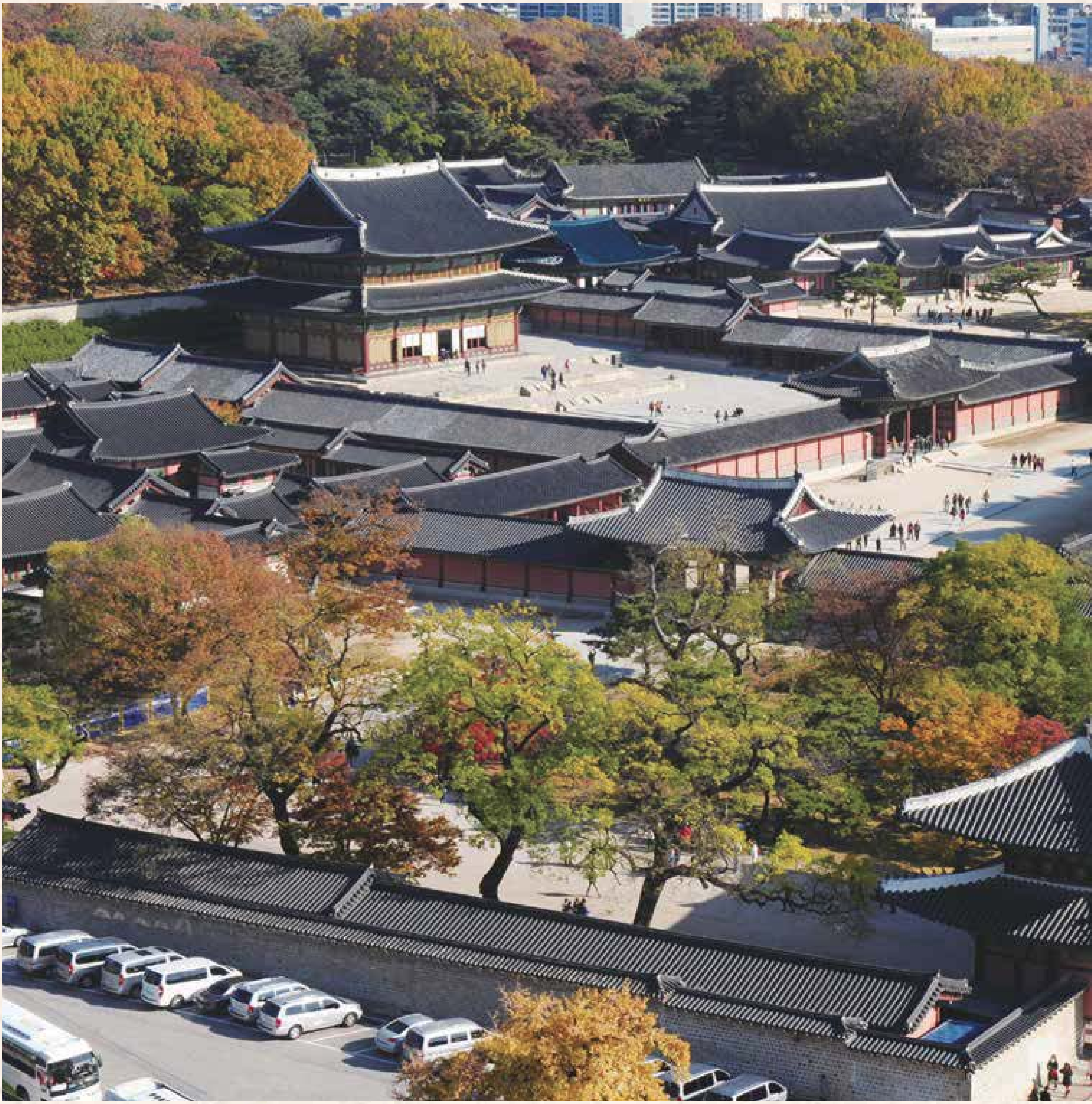
글 김영중 서기관(의사국 의정기록1과)

3)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2. 30, 법률 제5136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전부개정

4) 2010년 2월 25일 제287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 3월 19일부터 여성위원회가 여성가족위원회로 명칭 개정

5)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은 1조 4천65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536억 원 증액되어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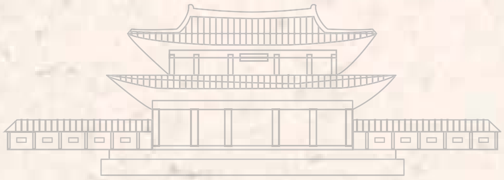
6)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1405년(태종6년) 창건된 창덕궁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아서

태종의 창덕궁과 세종의 경복궁에 담긴 여러 겹의 쌍 개념



‘태조 vs. 태종’과 ‘태종 vs. 세종’의 두 겹의 쌍 개념

조선시대 한양에는 ‘궁(宮)’자가 들어간 건물이 생각보다 많았다. 일단 경운궁이나 도정궁처럼 왕족들이 사는 한옥을 ‘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잠저(潛邸, 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사가)는 운현궁에서 보듯이 무조건 뒤에 ‘궁’자를 붙였다. 이외에도 수강궁이나 경모궁 등 왕실의 궁궐이기는 하지만 정식 궁궐은 아닌 궁도 여럿 있었다. 물론 절정은 정식 궁궐일 것이다. 무려 다섯 곳의 궁궐이 있었다. 경복궁을 필두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다.

다섯 궁궐은 각각 창건의 시대 배경과 역할이 있었다. 더하여 500년 이상 역사가 진행하면서 조선이 겪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더불어 다섯 궁궐 사이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조합’이 가능해진다. 그 최고봉은 단연 ‘경복

궁-창덕궁'의 짝일 것이다. 우선 조선 건국과 함께 탄생한 짝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차원의 역사적 무게감부터 압도적이다.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흥미로운 여러 쌍 개념이 파생한다. 크게 보면 조선 건국 초기의 왕조사와 건축 배치구성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분해서 네 단계로 얘기를 풀어보자.

1단계로, 왕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태조 vs. 태종'과 '태종 vs. 세종'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두 짝의 쌍 개념에 대응된다. 태조가 경복궁의 뼈대를 지었지만, 왕자의 난으로 집권한 태종은 이를 싫어해서 창덕궁을 지어 나갔다. 세종은 즉위할 때 이미 두 곳의 궁궐이 주어진 건데, 두 곳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성리학 텍스트로서의 궁궐'이라는 왕권 시대의 건축 이상을 달성했다.

2단계로, 두 겹의 쌍 개념은 그대로 세 왕의 개인 성격과 정치적 업적에 대응한다. 삼대 모두에서 선왕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절묘한 상호보완작용이 일어났다. 태조는 무인이었지만 정도전의 성리학 이상을 건국의 국시로 삼으며 개국했다. 용장이자 덕장으로 혼란스러운 고려말의 위기를 역성혁명의 창국(創國)으로 극복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동아시아 왕권 국가에서 건국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권력투쟁의 혼란을 수습할 정치력은 부족했다. 태종은 부왕 태조가 남긴 업적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부족한 점을 메웠다. 권력의 화신이자 강력한 왕권주의자였던 태종은 개국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는 등 권력을 공유하고 있던 신권(臣權)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며 왕실의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그는 덕과 학문이 부족했다. 세종은 다시 태종의 업적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부족한 점을 메웠다. '책벌레'였던 세종은 부왕이 닦아놓은 탄탄대로 위에 세계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문치(文治)'의 꽃을 활짝 피웠다.

3단계로, 세 왕의 개인 성격과 정치적 성향은 다시 그대로 세 왕이 건립한 궁궐의 배치구성에 드러난다. 태조가 건립한 이른바 '경복궁 창건 안'에서는 다섯 개의 문과 그 사이사이에 배치한 세 채의 건물, 그리고 금천교까지 합해서 무려 아홉 개의 시설이 일렬로 늘어서며 강력한 중심축을 형성했다. 이는 창국한 세상을 향해 궁궐로서 '중(中)'의 미학을 선포한 것인데, 그 속에는 무인이었던 태조의 질서지향적 성격과 정도전의 성리학 이상이 함께 들어있다.

태종은 의외로 이런 경복궁을 싫어했다. 본인은 권력의 화신이었지만 궁궐마저 딱딱한 법치 이상을 드러내는 걸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했다. 실제로 '태종실록' 14년 6월 28일자에는 중신이었던 하륜이 경복궁에 대한 태종의 거부감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경복궁은 산이 가두고 물이 말라서 임금을 사로잡고 겨레붙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창덕궁을 지어 나갔다. 이런 창덕궁에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을 맘껏 구현했는데 그 특징은 한 마디로 '변(變)'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창덕궁의 변칙 구성 vs. 경복궁의 예학 이상

구체적으로 보면 정문인 돈화문에서 정전인 인정전에 이르는 동선을 두 번이나 직각으로 꺾었으며, 이후의 편전과 침전에 이르는 동선은 아예 흐트러뜨린 쪽에 가깝다. '주례'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궁궐의 표준 구성인 '오문삼조'의 규범을 거부한 것인데, 우선 '주례'를 창국의 교과서로 삼았던 정적 정도전의 성리학 이상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하면 태종의 통치 스타일인 '변'의 미학에 그대로 대응된다. 왕자의 난부터 '변칙'이었으며 이후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피의 숙청'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칙'의 연속이었다. 궁궐의

경복궁. 자경전 만세문 앞에서 본 전경

경복궁. 강녕전 영역에서 본 전경

배치구성을 왕권의 과시와 동일시하지 않고 오로지 왕의 심리적 휴식처로만 본 것인데, 이 또한 동아시아 왕권 시대 때 궁궐의 기본 성격을 파격하는 변칙적 생각이었다. 태종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겉으로 강한 성격의 권력자들이 속마음은 섬세하고 여리다는 의외성을 대표하는데, 이것도 또 다른 변칙의 하나일 수 있다.

세종에 오면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세종 개인적으로는 창덕궁보다는 경복궁을 좋아한 편이었다. 무엇보다 그 스스로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세종이 보기에 성리학 정신 위에 지은 경복궁이 더 이상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하여 '예학(禮學)'의 양대 축 가운데 '중(中)'의 미학만 구현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경복궁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머지 절반인 '화(和)'의 미학을 구현하고자 대대적인 2차 중건 공사를 시행했다. 태조 때 창건한 중심축의 마지막에 '양의문-교태전' 영역을 추가했으며 무엇보다 중심축 주변으로 동궁, 흠경각, 자경전(원래 이름은 자미당), 함원전, 집현전 등의 2차 영역을 대거 추가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경복궁은 사실 세종이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2차 영역들은 딱딱한 대칭축 구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비대칭 구성으로 배치했으며, 최종적으로 모든 영역이 서로 간에 어울림의 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화(和)'의 미학을 공간으로 구현했다.

4단계로, 쌍 개념과 관련한 자잘한 팩트로 마무리하자.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두 궁궐은 왕권 시대 궁궐의 이원 체계인 '법궁(法宮)-이궁(離宮)'의 쌍 개념을 각각 대표한다. 법궁은 표준이 되는 중심 궁궐이고 이궁은 왕이 법궁을 떠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종의 별장 개념의 궁궐이다. 다음으로 왕권 시대 궁궐에서 빠질 수 없는 후원에서도 두 궁궐은 차이를 보인다. 경복궁은 향원정이 고종 때나 되어서야 조성한 것이어서 대체로 후원이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다. 반면 창덕궁은 본궁보다 후원이 더 유명할 정도다. 더욱이 이 후원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 사상을 맘껏 즐기며 동아시아의 정원 전체를 통틀어서 도가 사상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수작 중의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그래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를 이유에서인지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경복궁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요즘 말로 경복궁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다. 반면 이런저런 지표를 종합하면 정작 한국인과 서울시민은 아무래도 창덕궁보다는 경복궁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하다. 물론 너무도 소중한 이 두 궁궐 사이에 등급을 매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글 | 사진 임석재(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의 벚꽃엔딩

대전 계족산

계족산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대청호반 풍경

봄이 오니 온 산에 생명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4월의 산들은 아직 신록이 무성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다퉈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로 생기가 넘쳐나는 시기다. 제철 봄꽃 구경에 산행을 다닐 맛이 난다. 또한 겨울잠에서 깨어나 생명의 기운이 진동하는 땅을 밟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또 있을까.

이즈음 대전 '계족산'(423.6m) 산행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봄의 충만한 에너지를 호흡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몸 안으로 전해지는 생명의 기운은 도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주고도 남는다.

대전 동편에 자리한 계족산은 그리 유명한 산은 아니다. 서쪽의 계룡산처럼 기운차거나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산세가 포근하고 유순해 눈부신 봄날과 잘 어울리는 산이다. 어느 봄날, 별 기대없이 올랐다가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정상에 서니 드넓은 대청호 푸른 물이 눈앞에 펼쳐지다

계족산(鷄足山), 뜻을 풀어보면 '닭발산'이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그리 해괴한 이름을 붙였을까. 산 이름치고 참 폼이 나지 않는다. 산줄기가 닭발처럼 퍼져 나가서 그리 불렸단다. 원래는 봉황산이었는데 일제에 의해 격하돼 계족산이 됐다고도 한다. 산 바깥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안으로 들어서면 숲이 깊고 울창해 봉황산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것도 같다.

계족산 산행은 적게 3시간에서 길게 5시간이면 충분하다. 등산 코스가 여러 곳이고 오르는 길도 많다. 대전의 외곽 장동삼림욕장 입구로 오르는 코스가 대표적이지만 현지인들은 접근성이 좋은 비래골 코스를 즐겨 찾는다. 무난하면서도 핵심을 빼놓지 않고 두루 돌아볼 수 있다. 시내에서 가까운 비래골을 기점으로 옥류각~절고개~계족산성~황톳길로 이어지는 4~5시간 원점회귀 코스로, 계절마다 달라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발이 피곤할 틈이 없다.

출발지는 송촌동 선비마을 뒤편 경부고속도로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래골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수백 년은 족히 된 듯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나그네를 반긴다. 수령 500년이 넘는 이 나무는 비래마을의 수호

신 당산나무다. 느티나무를 지나 10여 분 올라가면 자그마한 절 비래사가 나타난다. 비래사 입구 계곡 위에는 옥류각이라는 정자가 고고한 모습으로 서 있다. 누각 아래엔 골짜기에서부터 사계절 옥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린다.

비래사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계족산의 품안으로 들어간다. 절고개까지 40분 정도 오르막이 유일한 난코스다. 완만한 편이라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절고개에 오르면 정자가 있어 턱까지 찬 숨을 잠시 고르고 흐르는 땀도 식힐 수 있다. 절고개에서부터는 여러 갈래길이 펼쳐진다. 북쪽 비탈길은 정상인 계족산성으로 오르는 길이고, 서쪽과 동북쪽 임도엔 황톳길이 펼쳐져 있다.

황톳길은 잠시 보류다. 계족산성을 가기 위해 북쪽 능선으로 오른다. 능선을 걷는 중간중간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그 어떤 명산에도 뒤질 바가 없다. 계족산성까지 울창한 낙엽송이 무리를 지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그 나무들이 뿜어내는 진한 피톤치드에 기분이 상쾌해진다.

정상에는 띠를 두른 듯 돌로 쌓은 계족산성(사적 제355호)이 자리하고 있다.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 지역에 위치했던 이 산성은 두 나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산성 위로 올라서면 대전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뿐 더러, 방향을 바꾸면 멀리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 푸른 물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드넓은 대청호를 이처럼 고스란히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명소로는 이곳이 최고다.

계족산성

등산로에서는 돌탑을 만날 수 있다.

산허리 휘감은 황톳길, 꽃길 따라 꿈길을 걷다

왔던 길을 되밟아 다시 절고개로 돌아온다. 절고개에서 산허리를 따라 한 바퀴 이어진 3시간짜리 황톳길(14.5km)은 봄날 계족산 산행의 백미다. 울창한 삼림을 따라 꼬불꼬불 끝없이 펼쳐지는 황톳길은 하루를 몽땅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시계 방향을 따라 임도삼거리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산허리를 빙 돌아 황토가 깔린 싱그러운 숲길이 이어진다. 산 전체에 소나무, 전나무, 상수리나무가 울창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절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이하게도 이곳에서는 맨발 산행을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예로부터 맨발걷기는 오장육부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발바닥을 골고루 자극해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하물며 황톳길이다. 황토에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다량의 미생물이 있으며 원적외선

벚꽃이 활짝 핀 계족산 황톳길

을 방출해 인체에 유익하다고 한다. 코스 중간중간엔 세족장이 있어 원하는 구간만큼만 맨발로 걸은 뒤 발을 닦을 수도 있다.

사계절 어느 때나 좋지만 계족산 황톳길을 제대로 즐기려면 4~6월이 가장 좋다.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고 땅에는 아직 대지의 찬 기운이 남아 있는 계절, 신발을 벗고 맨발로 푹신푹신한 황톳길을 사뿐사뿐 걸어보자.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온몸으로 퍼지는 대자연의 상쾌한 느낌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게다가 4월엔 황톳길을 따라 벚꽃이 만발해 마치 꿈길을 걸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주로 도심의 가로수로만 벚꽃을 보다가 산속에서 지천으로 핀 벚꽃을 만나니 감동은 몇 배나 더 황홀했다.

이 길은 꽃이 만개했을 때도 좋지만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질 때 더욱 아름답다. 운 좋게도 이 길에서 봄바람에 벚꽃잎 흩날리는 영화같은 풍경을 마주한 적이 있다. 하늘 가득 꽃비 나리는 황홀경에 감격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림같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세상 시름일랑 잊은 지 오래다. 땅거미가 내리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하염없이 걸었을지 모른다. 버스커버스커가 부른 '벚꽃엔딩'이 계속해서 입에서 맴돌았던 4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봄바람 휘날리며/흩날리는 벚꽃 잎이/울려 퍼질 이 거리를/둘이 걸어요….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찾아가기

- 비래사 입구 코스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가깝기 때문에 송촌동 선비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해도 금방이다.
- 승용차로는 대전 나들목에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비래골이 있다. 나들목에서 나와 우회전해 송촌동 선비마을 앞에서 비래사로 향하는 굴다리로 들어가면 된다.

백신을 맞지 않아 창궐한 병, '홍역'

요즘 세대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야기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홍역귀(紅疫鬼)라는 귀신을 무서워했다. 이 홍역귀가 사람한테 붙으면 얼굴이 붉게 변하고 온 몸에 발진 증상과 함께 고열에 시달리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합병증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병을 홍역(measles)이라고 불렀다. 홍역을 앓게 되면 성인들은 병을 이겨냈지만 어린아이들은 합병증을 앓다 사망했다.

문제는 이 홍역이 현대의학 이전의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사실이다. 홍역에 걸리면 병이 자연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치료법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홍역을 가리켜 '손님'이라거나 '마마'라고 부르며 무서워했다.

홍역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홍역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조류독감이나 메르스 같은 다른 전염병들과 달리 홍역은 동물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고, 오직 사람들끼리만 감염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보다 훨씬 빠른 감염 속도

홍역의 무서운 점은 감염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기침을 통해 퍼지는 감기성 질병들은 감염 범위가 1.5미터 내외지만, 홍역은 그보다 훨씬 긴 무려 50미터나 된다. 홍역 환자 한 명이 최대 50미터 이내의 사람들한테 병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홍역은 감염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한 예로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100명이 한 방에 모여 있을 경우, 그들 중 한 명만 홍역에 걸렸다면 나머지 99명도 모두 순식간에 감염된다. 이는 전염의 확산 속도가 빨라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처럼 홍역은 현대 의학에 따른 백신이 도입된 196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각국에서 매우 흔하면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죽음과 세금과 홍역은 피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와중인 1963년 미국에서 홍역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되면서, 각국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해 홍역은 크게 줄어들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63년부터 홍역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1960년대 초반에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던 홍역 발생 횟수가 1980년대에는 수천 건으로 거의 100분의 1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고 2013년이 되자 매년 발생하는 홍역 건수는 불과 220건 수준에 그쳐 미국 정부는 2016년 자국 내에서 홍역이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돌연 미국에서는 홍역 발생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혹시 미국에서 기존의 홍역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종 홍역이 등장했던 것일까?

결론은 아니었다. 홍역의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이유로 인한 현상이었는데, 2016년 이후 미국에서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홍역에 걸린 환자들도 늘어났던 것이다.

백신 거부자들은 홍역 백신을 맞으면 아이가 자폐증이나 정신질환에 걸린다고 주장하면서 접종을 거부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미국에는 워낙 별의별 음모론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홍역 백신을 포함한 백신들을 거부하는 미국인이 적지 않다.

백신 음모론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홍역에 한 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도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홍역에 다시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글 도현신 작가

임옥상, '봄봄', 서양화, 캔버스에 유채, 130.3x97cm, 2008

자연의 이치와 그림의 역동

이 그림에는 진달래가 보인다. 봄을 대표하는 색은 분홍이다. 진달래 산천이라는 말마따나 봄이면 온 산천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의 봄이다. 임옥상의 유화 작품 '봄봄'은 진달래를 그린 그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색채와 붓질에서 진달래가 피어난 풍경을 유추하고 그것으로부터 봄의 기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다. 이처럼 그림은 색채 하나만으로도 강하게 규정해 들어가는 메시지의 발화를 시작한다. 붉게 물든 진달래 산천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담아낸다. 처절하게 아름다워 슬픔에까지 도달하는 4월 진달래의 서정은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면서도 애절하다.

자유로운 붓질로 추상의 세계, 비가시적인 힘 표현

이 그림에는 나무가 보인다. 좌측 하단으로부터 굵게 뻗어 올라가는 힘찬 선은 무수한 가지들과 이파리들을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다. 그 기둥을 바탕으로 역동하는 선들이 이어지는데, 그 속에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기운들이 담겨 있다. 어느 정도의 길이로 뻗어나가는 직선들은 금세 곡선으로 꺾이고 다시금 각도를 크게 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반복한다. 그 선들은 체계적이면서도 우발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며 화면 전체를 추상의 공간으로 구획한다. 구체적으로 나무 형상을 재현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그 형상의 구체성을 흐트러뜨림으로써 형상 너머의 세계, 즉 나무에 담긴 자연의 역동성을 유추할 수 있는 추상의 세계를 획득한다.

이 그림에는 길이 보인다. 나무기둥처럼 보이는 선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마을의 길이기도 하고, 골짜기와 골짜기를 연결하는 물길이기도 하다. 사람이 만든 마을길이든, 자연이 만든 물길이든 그 길에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다. 화가는 그 길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붓길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풀어헤치고 있다. 무릇 회화는 재현이냐 표현이냐 하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분기점을 만난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십상이다. 임옥상 또한 청년 화가 시절에 재현에 집중하는 리얼리스트로 활동해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던 화가는 점점 재현을 넘어선 표현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이 그림에는 기(氣)가 보인다. 기는 움직임이다. 그것은 활동운화(活動運化)하는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주관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해서 만물과 만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치는 일찍이 문명을 개척해온 초기 인류들부터 헤아려 온 위대한 지혜다. 그 지혜를 체계화한 것이 동양의 기와 서양의 에네르기 개념이다. 임옥상은 그림을 통해서 에너지를 드러낸다. 비가시적인 힘을 가시화하는 것은 화가의 붓질 그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기도 하고, 에너지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치밀한 지적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자연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작가

임옥상은 유화 작품인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태도

국회 본관 5층에 걸려 있는 임옥상의 '봄봄'

와 방법을 흙그림으로 그대로 옮겨놓았다. 임옥상 예술의 초창기 이래 흙은 가장 대표적인 매체이자 소재가 됐다.

그는 이미 1980년대부터 흙을 소재나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왔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아예 흙이라는 물질을 매체로 사용하면서 평면과 입체, 나아가 설치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의 작업을 해왔다. 흙은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면서 자연이라는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데 최적화한 작품이 바로 흙이다.

임옥상 그림에는 자연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자 주제인 흙을 비롯해 바람과 나무 등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을 작품 속에 등장시키는 예술가 임옥상은 자연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이야기한다. 흙과 바람과 나무에 담긴 자연 현상과 사물의 이치는 곧 우주적 진리를 담은 하나의 가치로 승화한다. 우주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추상명사인데, 임옥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연 현상이나 사물 속에 우주의 모습이나 이치가 들어 있다는 것 또한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다.

사회비판적인 현실주의를 추구하며 1980년대 이래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리얼리스트로 살아온 화가가 자연 현상과 사물을 통해 우주적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견 '사맛디 아니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꺼풀만 더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자연과 사회 양자를 관통하는 진리의 핵심 열쇠가 들어 있다. 그것은 움직임이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실체다. 움직임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변화의 역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氣), 즉 에너지다. 사회변혁의 에너지나 자연 순환의 기운 등 모든 것은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자 결과의 문제다. 결국 예술가 임옥상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핵심은 자연의 이치와 그림의 역동을 연결하는 움직임 그 자체다.

글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성립요건 5만명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국회민원지원센터 02-6788-0081

한자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노력

한자를 노출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한글이 공용어가 되자 언어생활에서 한자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우리말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기본 한자를 가르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가 공유해온 문화의 토대가 한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자를 많이 아는 것이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거부할 일은 아니다. 온전히 한글로 표기하는 글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세월이 흐르면 어원을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기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가 있었다. 어색한 한자어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자의 뜻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어색한 단어를 만드는 일도 있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단어는 '노견(路肩)'이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자고 해서 바꾼 것이 '길어깨'였다. '길 로, 어깨 견'이니 우리말로 길어깨. 참으로 단순 명쾌하지만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길어깨라는 말이 있으니 길몸통도 있고 길머리도 있고 길다리도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다고 지적했지만 도로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늘 '길어깨 없음'이라고 크게 써서 안내하곤 했다. 지금이야 '갓길'이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으니, 길어깨라는 단어는 까무룩하게 잊혀지고 말았다.

이런 일보다 더 큰 문제는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동음이의어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십여 년 전의 일이다.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나는 지역 조사나 출장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닌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 횡성 부근을 지나는데, 솔숲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자세히 보니 소나무에 무언가를 주렁주렁 매달아놓고 한쪽에는 '수간주사'라고 크게 써서 걸어놓은 것이었다. 문득 수간주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숲속 나무에 주사를 놓고 있으니 나무 사이에 놓는 주사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았다. 얼른 사전을 찾아보니 '수간주사(樹幹注射)'라는 한자어였다. 나무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수간주사라는 단어는 이미 '나무주사'로 바꾸어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슷한 단어가 또 있다. 농촌을 다니다 보면 '○○리 작목반'이라고 쓴 표지판을 자주 발견한다. '작목'이라는 단어를 한글로만 써놓으면 나무를 기른다는 뜻의 '작목(作木)'이 먼저 떠오른다. 작목반이라고 할 때의 작목(作目)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일부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다). 한자사전과 일본어사전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는 품목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다.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작목'은 재배하는 품목을 뜻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좋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실시, 박병석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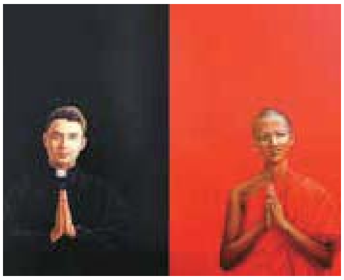
3월 3일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
3월 7일	• 행정안전위원회, 동해안 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 정부의 산불 진화 및 향후 복구 작업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
3월 9일	• 제20대 대통령 선거 실시
3월 10일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제20대 대통령 당선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 조은희(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김학용(국민의힘, 경기 안성), 정우택(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임병헌(무소속, 대구 중·남) 후보 당선 • 박병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예방을 받고 "국회·야당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
3월 13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임명
3월 14일	•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에 윤호중 원내대표, 박지현 전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 임명
3월 15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원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3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2024년 초까지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3월 18일	• 박병석 국회의장, 7박 9일간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3월 21일	• 국민의힘, 6·1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장에 정진석 국회부의장 임명
3월 22일	•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질의 실시
3월 23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5월 10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잇따라 만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
3월 24일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박홍근 의원 선출
3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상춘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회동 •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접견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4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Mori_rEsEt	보이는 것, 그 너머에
2022. 4. 2. - 4. 14.	2022. 4. 15. - 4. 29.

작가 : 최임정 / 추천 : 김희곤 의원



작가 : 박경규 / 추천 : 한정애 의원

- 편집후기 -

전 세계가 코로나19 와중에 닥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키이우(키예프)를 수호하는 코자크 후예의 용맹함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월은 다시 우크라이나 비옥한 초원에 쟁기소리 울리게 하고, 국회 뒤 벚꽃 길도 발소리로 가득 채우는 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환철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위원(공보기획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상기후 탓인지 봄이 왔다는데도 봄 같지 않은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마음도 여전히 웅크려지기만 합니다. 4월에는 꽃과 함께 즐거운 소식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김현아

새 봄이 찾아와 서울 곳곳에서 매화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곧 국회 뒷길에도 벚꽃이 만개할 텐데 올해는 창덕궁, 경복궁 그리고 대전 계족산에서도 봄꽃을 즐겨볼까 합니다. - 고영선

낮이 밤보다 길어진다는 춘분이 지나고 이제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시기를 맞아 여의서로 벚꽃길이 제한적으로 개방된다고 합니다. 활짝 핀 봄꽃이 코로나19로 힘든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박민선

정춘숙 의원과 함께 용인 수지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마주친 시민들이 정 의원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 애써줘서 감사하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